

Incheon National University
Faculty Association White Paper

발행 | 제5대 전체교수회
집필 및 감수 | 박재윤(20대 교수협의회장)
김용민(제19, 21대 교수협의회장, 제1대 교수회장)
최병길(제14대 교수협의회장)

인천대학교 교수회 백서

2026년 4월 30일

발 간 사



존경하는 인천대학교 교수님,

우리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 자율성을 향한 38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인천대학교 교수회 백서』를 발간하며, 그 준엄한 기록 앞에 섰습니다. 본 백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 및 감수를 맡아주신 박재운(20대 교협회장), 김용민(제1대 교수회장), 최병길(14대 교협회장) 교수님과 사업을 시작해 주신 제4대 전체교수회 옥우석 회장님, 그리고 출판을 위해 검토 및 정리해 주신 제5대 전체교수회 신은기 부회장님, 차재민, 박민범 정책국장님, 이승용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교수회의 역사는 곧 인천대학교의 생존과 발전의 역사입니다. 1988년 대학 민주화를 기치로 창립된 교수협의회는 선인학원의 부당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회장의 파면과 57일간의 철야농성, 10만 시민 서명운동으로 이어진 시립화 투쟁은 우리 대학을 사학 비리의 상징에서 시민의 대학으로 탈바꿈시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후 송도 캠퍼스 이전, 전문대 통합, 국립대 법인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교수회는 늘 대학의 명운을 걸고 비민주적 행정과 독단적 의사결정에 맞서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존립의 위협은 물론, 국립대 법인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재정 구조와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는 우리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부의 행정적 효율성 강조라는 미명 아래 교수님들의 자율적인 학술 활동이 제약받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등 행정 및 재정 전반에 걸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내외의 압박은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진리 탐구와 교육의 가치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기록물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의 없는 발전은 허구"라는 준엄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미래의 지침서입니다. 이에 우리 교수회는 대학 평의회와 교수회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와 대학본부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며,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의 본령이 행정 편의주의와 부당한 권한 전횡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 백서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제4·5대 전체교수회 운영위원회와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전체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4월 30일

인천대학교 제5대 전체교수회 회장 박정준 올림

0. 연혁

1. 교수협의회 창립	1
2. 교내 민주화 및 시립화	3
3. 송도캠퍼스 이전 및 전문대 통합, 국립대법인화	13
가. 전문대 통합 관련	13
나. 송도 이전 및 부지 갈등	17
다. 국립대 법인화 전환	20
라. 국립대학법인 추진 과정	28
마. 법인화 이후 재원 및 부지 문제	30
1) 이전 이후 부지의 협소함과 제물포 캠퍼스 문제 제기	30
2) 인천시 지원금 이행 촉구 및 집행부에는 재원확보 요구, 보완협약에 대한 반대	31
4. 교수회 설립	38
가. 교수회 학칙화 과정	38
나. 교협 해산 및 교수회 출범	44
다. 교수회 운영 -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46
1) 온라인 선거 등을 포함한 교수회 규정 개정	46
2) 교수회 소통 채널 마련	46
5. 교내 현안 활동	49
가. 총장선거 관련	49
1) 1996년	49
2) 2004년	50
3) 2006년 총장 중간평가 실시	54
4) 2008년 선거	54
5) 2010년 총장중간평가	54
6) 2012년 선거	54
7) 2014년 총장중간평가 및 총장선출규정 마련	55
8) 2018년 중간평가	57

9) 2020 총장선거	58
10) 2021년 총장선거	63
11) 2023 중간평가	63
나. 학교 운영 관련 활동	64
1) 대학 편제 및 구조조정	64
2) 학교 운영 비판	68
3) 예산	72
4) 인사 및 조직	72
5) 이사회	77
6) 평의원회	79
7) 공간 및 시설	79
8) 토론회 개최	80
9) 기타	81
6. 교수 복지 관련 활동	82
가. 교수 복지 일반	82
1) 교원 보수, 연구년 제도, 교수업적평가, 강의 부담 등	82
2) 소위원회 구성	86
3) 신입교원 관련	86
나. 교수 노조 및 노사협의체 관련	87
1) 교수 노조 필요성 연구 및 홍보	87
2) 노사협의체 관련	88
7. 대외활동 관련	89
가. 교육부 및 중앙정부정책 관련	89
나. 인천시 관련 (재산 관련 제외)	91

0. 연혁

[교수협의회, 1988.09.08.-2016.12.31.]

	기간	회장	부회장	주요임원
1대	1988.09.08.-1990.02.	김주익(법학)	박수복(체육), 정천구(정치외교)	(교수협의회 창립)
2대	1990.04.-1990.09. (잔여임기)	강치원		
3대	1990.09.06.-1992. 01.06.	장석우(교육)	강 광(미술), 이승종(경영)	총무: 신현재(산업경영) / 간사: 윤용만(경제)
4대	1992.04.-1993. 03.	장학식(경제)		
5대	1993.03.-1995.03. 08.	강 광(미술)		
6대	1995.03.09.-1996. 02.	장학식(경제)	김영선(법학)	총무: 이재석(정치외교), 이갑영(경제)
7대	1996.03.-1998. 02.	허명재(건축)	전형진(영문) (96.03- 10), 이윤식(교육) (97.03- 98.02)	총무: 최계운(토목공학), 김재영(행정)
8대	1998.03.-2000.02.	장권봉(미술)	이덕구(국민윤리)	총무: 최병길(토목공학), 김복영(교육) 감사: 이경애(불문), 김준우(경영)
9대	2000.03.-2002. 02.	김종희(독문)	홍재욱(경영)	총무: 민병준(컴퓨터공학) 서기 및 회계: 김정완(생명과학) 업무인계: 장권봉(디자인), 김복영(교육)
10대	2002.03.-2004. 02.	김병욱(국문)	김철홍(산업공학)	총무: 노영돈(법학), 김강우(화학)
11대	2004.03.-2006.02.	김철홍(산업공학)		총무: 안춘순(패션산업), 성영애(컴퓨터공학), 정순섭
12대	2006.03.-2007.	김병욱(국문)	최계운(토목공학)	총무: 류인모(법학), 김화순(영문)
13대	2007.-2008. 02.	최성을(물리)		
14대	2008.03.01.-2009.03.24	최병길(토목)	김내현(기계공학)	총무: 김용민(불문), 옥우석(무역) 감사: 김복영(교육), 박제훈(동북아통상)
15대	2009.03.24.-2009. 09. 07.	남호기(산업공학)	김내현(기계공학)	총무: 김용민(불문), 옥우석(무역)
16대	2009.09.08.-2010.02.28.	김내현(기계공학)		총무: 김용민(불문), 옥우석(무역) 감사 : 김복영(교육), 박제훈(동북아통상)
17대	2010.03.01.-2010.08.20.	박보용(기계공학)		총무: 양준호(경제)
18대	2010.08.21.-2012.02.28.	김성중(안전공학)	박창화(도시환경)	총무: 홍진배(체육), 이은주(공연예술)
19대	2012.03.-2014.12.31	김용민(불문)	유병국(무역)	총무: 이형우(역사교육), 김재곤(산업경영) 감사: 박재세(전기공학), 이성민(신소재공학)
20대	2014.01.01.- 2015.12.31	박재윤(신소재공학)	김은영(기계공학), 전영우(신문방송)	총무: 윤병조(도시공학), 서태일(기계공학) 감사: 나인강(경영)
비대위	2016.01.01.-2016.08.24.	김은영(기계공학)	전영우(신문방송)	총무: 윤병조(도시공학), 서태일(기계공학) (차기회장 출마자 부재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
21대	2016.08.25.-2016.12.31	김용민(불문)	김순홍(무역), 이형우(역사교육)	총무: 문상일(법학), 박경석

[교수회, 2017.01.01.-]

	기간	회장	부회장	주요임원
1대	2017. 01.-2018. 10.	김용민(불문)	홍윤식(컴퓨터공학)	정책국장: 이형우(역사교육) 사무국장: 문상일(법학), 이영애(소비자)
2대	2018. 11.-2020. 10.	유병국(무역)	정영식(전기공학)	정책국장: 김순홍(무역) 사무국장: 이영애(소비자), 송창근(안전공학)
3대	2020. 11.-2022. 10.	홍진배(체육)	김 호(법학)	정책국장: 박요한(정치외교) 사무국장: 권재현(동북아통상), 권순학(조형예술)
4대	2022. 11.-2024. 10.	옥우석(무역)	박정준(체육교육)	정책국장: 이창연(에너지화학공학) 사무국장: 강년주(체육)
5대	2024. 11.-2026. 10.	박정준(체육교육)	신은기(도시건축)	정책국장: 차재민(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 박민범(에너지화학공학) 사무국장: 이승용(체육교육)

1. 교수협의회 창립

- 1988년 여름 준비위원회 결성, 9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김주익(법학과) 교수 회장 선출
- 김주익 교수 정년 퇴임 후 잔여 임기 회장으로 강치원 교수 선출, 당시 대행 체제나 잔여임기 회장 선출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잔여임기 회장 선출로 결정

1988	05.-08	교협 결성 준비위원회 결성	- 백여 명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결성 - 김주익 교수 부위원장 선출 - 회칙(안) 준비	시립화 성공사
1대 김주익	09. 08.	교협창립총회	- 김주익 회장 선출	"
1989	02.	잔여임기 회장 선출	- 김주익 회장 정년퇴임으로 잔여 임기 회장으로 강치원 교수 선출 - 회장 대행 체제 유제와 잔여임기 회장 선출 관련 논쟁 이후 잔여임기 회장 선출로 결정	

- 교수회 창립 초기의 목적은 대학 민주화 및 재단 정상화, 대학 건설문제, 교수 신분 및 처우 문제, 구성원 복지 문제 등에서 시작

1988	10. 12.	제2차 운영위원회	- 인천대의 다음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의견서를 작성 1) 대학의 민주화 및 재단의 정상화 문제 2) 건설 및 시설 문제 3) 교수의 신분보장 4) 교수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 5) 교수 처우의 현실화 6) 교수 및 학생 복지 실태의 개선	"
------	---------	-----------	---	---

- 1988년 12월 교협은 총장후보 및 단과대학 학장 후보를 선출, 그러나 대학 본부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교협 인정에 대하여 대학 본부와 갈등

1988	12. 08.		- 12월 8일 「총장후보선출규정」 마련	
	12. 19.		- 12월 19일 초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김주익 교수 1순위 후보자로 선출(4차 투표 68표) 박재규 학장 2순위 후보자로 선출(5차 투표 77표)	교수협의회보 제2호: 12쪽
1989	01. 05.		- 선인학원이사장에게 총장후보 선출 결과를 통보하고 초대 총장의 임명을 요청 - 재단은 '89년 1월 18일 제13차 이사회에서 제2순위자인 박재규 학장을 초대 총장으로 임명	"
1989	02. 03.	제4차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 초대 단과대학장 선출 규정 통과	교수협의회보 제2호: 2쪽
	2월		- 「단과대학장선출규정(안)」 마련,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 후보 선출 인문대학장 : 장윤익(국어국문학과) 자연과학대학장 : 이봉규(물리학과) 사회과학대학장 : 은천기(국민윤리학과) 공과대학장 : 손필영(전기공학과) 경상대학장 : 최단옥(경제학과) 예·체능대학장 : 이종학(미술학과)	
	02. 16.	교수협의회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 교수협의회서 선출된 총장후보 당선자를 순위대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제반 문제 토의를 위한 이사장 면담 요청에 대해 학장이 처리하도록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 교수 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하여 전체 교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한 회신 바람 > 만일 회신이 없거나 학장에게 회신을 하도록 한다면 교수협의회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	인교협: 제27호

2. 교내 민주화 및 시립화

- 대학의 민주화, 자율화를 위한 인천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작성 및 제출

1989	05. 24.	제15차 운영위원회의	- 학칙 및 규정 개정 문제	교수협의회보 제2호: 3쪽
	06. 07.	제5차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 학칙과 규정 개정에 대한 교수협의회 개정동의안, 운영위원회서 교협 학칙개정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함	교수협의회보 제2호: 2쪽
	07. 26.	제18차 운영위원회	- 대학의 민주화, 자율화를 위해 인천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에 관한 교수협의회 의결안을 제출	인교협: 제43호 인교협: 제44호

- 사립학교법 개정, 단과대학 학장 임명 및 인사 문제 등의 건으로 재단과 대립, 이에 재단은 교협 회장 사퇴 종용
- 이에 교육부에 재단과 백인엽의 관계 질의 및 관련 없음 답변 받음

1990	12. 04.	제6차 운영위원회	- 설립자 백인엽의 재단 이사회 장악 및 재단의 인사권에 관여하여 단과대학장을 직접 임명하려 한다는 방침에 반대 - 전체 교수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단과대학에서 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단과대학장의 후임자를 12. 14. 이전에 각각 선출하기로 결의	교수협의회보 제5호: 3쪽
1990	12. 06.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제출	-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위해 교수협의회장 장석우를 포함한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교수연구비에대한과세계획 유보, 일부 대학의 연구비 면세조치 악용을 고려하여 조치 필요	교수협의회보 제5호: 4쪽
	02. 20.	경인지역 임시총회 및 성명서	- 대학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 대학 내부 자치 기구 활성화를 통한 학내 민주화에 의해서만 대학의 신뢰 보장 가능 -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개적인 운영과 감시 기능 확보 -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 교수, 강사의 채용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	교수협의회보 제5호: 8쪽
	02. 26.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	- 설립자 백인엽, 교협 회장 사퇴 종용, 교협 회장 거부 -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 시작	교수협의회보 제5호: 8쪽
	04. 04.	제8차 운영위원회	- 장학식 교수, 교육부가 규정한 백인엽과 선인학원의 법률적 관계를 확인하자는 제의 발의, 04. 06. 관련 공문을 교육부 대학정책실 접수	교수협의회보 제5호: 8쪽
	04. 13.	교권수호 결의문	- 교수 재임용제도 폐지 및 사립학교법 전면 재개정 필요 결의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회로비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교수협의회보 제5호 :7쪽

			- 부적격, 부도덕한 사학경영자들에 대한 국민적 제재 필요 - 대학 내부의 자치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감시기능 제도화 필요성 논의	
04. 20.	교육부 회신공문		- 유형접 신임 장관의 지시로 회신 (대학: 25423-429) "대학운영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그 주체가 되며, 백인 업은 현재 학교법인의 임원이 아니므로 법인 운영에 있어 법률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합니 다."	"

• 교협과 재단 사이의 갈등 심화, 재단의 교협 탄압 및 징계, 이로 인하여 교협 축소

1991	05. 31.	재단의 교협 탄압	- 재단은 대학 총장에게 「법인 운영상의 유언비어 금지와 그에 대한 지도 철저 지시」 공문 송달 (선학제188호) "재단운영에 관해 귀 대학 내 일부 불순분자에 의해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철저히 지도하라고 경고	"
	06. 19.	교협 언론광고	-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인천일보 6월 19일자 1면 광고 게재 > 「선인학원 이사장 및 임원 여러분께 드리는 공개질의」가 5단 전면으로 게재	"
	07. 02.	재단의 교협 활동 징계	- 07. 02. 재단은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선학 제231호)에서 "「교협」 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즉각 징계 상신할 것"을 지시 - 7월에서 11월 사이 인천대학교에서는 「교협」 탈퇴 작업 진행 > 「파행적 운영과 분열을 조장하는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면서」라는 제목으로 탈퇴서 작성 후 서명을 받음 > 인천대 당국과 재단 측에서는 전체 교수의 2/3 이상 탈퇴를 목표로 회유, 설득, 위협, 협박 등을 진행 > 그 결과 교협 탈퇴 교수는 7월 말까지 90여 명, 9, 10월에도 계속되어 총 103명 이 탈퇴하여 「교협」은 전체 150여 명의 교수 중 50여 명만이 잔류	인교협: 제91-29호
	08~11.	재단의 탄압	- 1991년 2학기 개강 전날(08. 18.) 밤에 장석우 교수를 비난하는 흑색 선전물이 대학 내 각 건물에 수천 장 살포 - 재단 측, 여러 차례에 걸쳐 박재규 총장에게 '징계 상신' 요구하였으나 거부 - 재단측, 총장의 퇴진을 위한 '탄핵서명' 작업 돌입 및 총장 퇴진을 위한 흑색 유인물을 여러 차례 대학 구성원에게 살포	"
	11. 04.	제30차 이사회	- '선인학원교원징계위원회'를 '인천대학교원징계위원회', '인천전문대학교원징계위원회' 및 '초·중·고 교원징계위원회'로 별도 분리 구성하여 대량 징계 절차 개시, 특히 교협 회장에 대한 징계 관련 보고 청취	"
	11. 30. 12. 04.	교협 비상총회	- 인천대 교수협의회 잔류 교수 40여 명은 비상총회를 소집 「재단정상화작업의 완전 성취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채택	"
	12. 16.	비상총회	- 교협 비상총회 소집, 교협 사수 의지 표명 탈퇴 시 오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어음을 각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 발행, 서명 날인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음(36명)	"

			고혜영, 강 광, 강현철, 곽창섭, 권영웅, 김규완, 김배연, 김영구, 김영선, 김정규, 김종희, 민경탁, 민용규, 박규하, 박수복, 박재윤, 변윤식, 신현재, 안경수, 안옥수, 온천기, 윤용만, 윤찬원, 장석우, 장학식, 전광일, 정인숙, 정천구, 정태영, 차덕환, 최단옥, 최승국, 황규복, 황미옥, 황인창, 허명재	
--	--	--	--	--

- 재단은 교협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총장 거부, 결국 총장 사퇴 후 교협 총장 후보 선출

1991	08~11.	총장 퇴진	- 재단 측, 여러 차례에 걸쳐 박재규 총장에게 ‘징계 상신’ 요구하였으나 거부 - 재단 측, 총장의 퇴진을 위한 ‘탄핵서명’ 작업 돌입 및 총장 퇴진을 위한 흑색 유인물을 여러 차례 대학 구성원에게 살포 - 결국 12. 06. 총장 퇴진, 12. 03. 교협에서는 ‘박재규 총장의 사퇴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부당함 표현	교수협의회보 제5호: 3쪽
	12. 16.	비상총회	- 박재규 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총장직에 교협의 후보 선출 - 교수협의회 의원 56명 중 총장후보 선거에 43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장학식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 대학과 재단에 통보	”

- 당시 장석우 교협 회장 징계 및 파면

1991	12. 13.	교협 회장 징계	- 12. 13. 총장 직무대리로 장운익 부총장 교협 회장의 징계동의안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요구 - 12. 14. 오전 인사위원회 개최, 강 광 교수(미술학과)와 안경수 교수(토목공학과)가 징계 부당함 주장하였으나 결국 「징계동의안」 무난히 통과 - 같은 날 오전 장운익 대행, 재단에 교협 회장 징계 제청 - 같은 날 재단 이사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교협 회장에 대한 징계안 상정 및 심의 절차가 바로 진행, 교협 회장에게 12. 18. 11시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부(인대교징 제2호) - 12. 18. 교협 회장은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교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인학원 실상과 징계 부당성 역설, 인천의 중앙지 및 지방지 기자 10여 명이 참석	교수협의회보 제5호: 3쪽
	12. 16.	회장 징계 저지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 12. 16. 교협 교수들은 장석우 교협 회장 징계 저지를 위한 무기한 「철야대책회의」를 갖기로 하고, 16일 저녁부터 57일간 철야농성 시작, 「철야대책회의」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기획부, 홍보부, 섭외부 등의 부서와 회계 담당 등의 조직 구성, 농성 순환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 - 대학 당국은 교수들이 농성장으로 사용했던 교협사무실 감시 및 전화 차단 등을 통해 농성 탄압, 1992년 2월에는 교협 사무실 폐쇄, 이후 장학식 교수의 연구실을 교협사무실 겸 농성장으로 사용	”

	12. 20.	교협 회장 파면	- 징계위원회에서 장석우 교수에 대한 징계가 「파면」으로 결정 징계위원장 한 수(이사), 위원 박일재(이사), 이종열(부총장), 홍한기(교무처장), 신무호(학생처장) - 12. 31. 파면사실 발송, 장석우 교수 '92. 01. 02. 아침 '파면' 처분 통보	
1992	04. 08.	교협 회장 해임 재심 결과 성명서 발표	- 장석우 인천대 교수협의회장, 교육부 재심 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단의 비리나 부당한 학원 운영에 관하여는 외면하고, 교육 정상화를 갈구하는 교협의 활동을 문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수로서의 양심과 본분을 고수하여 학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04. 18.	교수협의회장 단독철야농성 해제	- 장석우 교협 회장 단독농성을 마치고 6일 만에 귀가, 민용규, 곽창섭, 강 광, 권영웅 교수 등도 귀가	
	5월 중순	재단 측 장석우 전임 회장을 경찰에 고발	- 재단 측이 장석우 교수를 경찰에 고발 조치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수 연구실(교협 임시 사무실)을 차지하여 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 침입·점거하였으며, 연구실의 잠금장치를 훼손함으로써 대학의 재산을 훼손하였다" - 이 고발 조치는 나중에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	

•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농성, 성명서 발표

1992	04. 13.	교협회장 성명서 발표	- 교수협의회장, 「단독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제하의 성명서 발표 선인학원의 정상화 활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육적 사명임을 재확인하면서, 그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1차로 92. 04. 18. 까지 교수협의회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장학식 교수 연구실에서 시한부 단독 철야농성에 돌입	
	04. 15.	성명서 발표	- '교협' 교수 40명 연명으로 「선인학원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범 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전개해 온 재단정상화 노력이 관계 당국에 의해 묵살된 채, 교수협의회장 장석우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재심 결과마저 재단 측의 전횡과 비리를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원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하여도 자제만을 당부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절감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재단 이사진과 대학의 보직교수들은 학내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 사퇴 하라. (2) 교육부 당국은 선인학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04. 16.	재단 장학식 교수 징계	- 재단의 지시를 받은 인천대 장윤익 총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장학식 교수에 대한 징계 동의하여 재단으로 넘김 - 4월 17일 교육부 감사로 인하여 징계 처리 불발	

05. 11.	진술서 관련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8일, 인천대 김 모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참회 진술서」에 대하여 교협은 설명서 발표, 다음은 그 일부임 <i>"지난 8일 공개된 김 모 교수의 백인엽에 대한 반역 죄인을 자처하는 진술서를 접하고 동료 교수로서의 깊은 연민과 수치를 느껴 언급을 피하고 싶으나, 우리 대학에 백인엽과 소수의 추종자들이 벌여 온 반교육적, 반지성적, 반민주적 행위에 짓밟히고 있는 교권 문제임으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i> 	
05. 24.	재단 이사장실 점거 농성 관련 교협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이사장실을 점거 농성에 관하여 긴급히 「교협」 총회 소집, 총회에서 점거 농성에 대한 찬반 격론이 진행 <i>"재단 이사장실에 대한 점거 농성은 교협 사무실에서의 철야 농성과는 그 의미가 다르며, 교수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i>는 반대론과 <i>"이 단계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 동안 전개해 온 정상화 투쟁이 한낱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i> 이라는 주장이 대립 - 격론 끝에 농성 참여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함 	
05. 25.	이사장실 점거 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협, 범선추 연합 철야 대책 회의에 임하면서」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1) 교육부는 현 이사장의 범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승인을 취소하고, 백인엽과 이사진 전원을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2) 관선 이사진의 구성은 백인엽의 영향력을 단절하고 개혁 의지와 능력을 지닌 인사로 구성하되, 인천시민 대표가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부는 부당하게 징계당한 교수, 교사 및 학생들의 신분이 즉각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낙후된 인천지역의 교육개선을 위해 선인학원의 국·공립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이사장실 점거 철야 농성 돌입, 인천대 교수 25명 정도와 중·고교 교사 20여명이 교대로 참가, 「시민의 모임」 및 「인천연합」 관계자들과 학생 대표 등이 방문, 지방지 및 중앙지에 기사화 	
06. 01.	교협 활동 교수 승진 보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22. 교육부는 1) 이사장 직무대행 지정의 건 2) 교육부 감사 01540-49호 처리의 건 3) 교육부 대 재 25423-240호 처리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의 처리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승인(대학 25423-938) - 그러나 육진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교육부의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안건인 '교원임면 의결안'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01. 승진 대상자였던 인천대 최동국 부교수 등 10명 중 「교협」 활동에 참여했던 안경수 교수를 제외한 9명에 대한 승진 임용을 의결 > 전문대와 산하 초중고교 그리고 행정 직원에 대한 무더기 파행적 인사 조치 결정 	

• 교협과 선인재단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범선인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발족

1991	07. 05.	범선추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에서 교수협의회가 중심, 선인학원 산하 초중고대 참여로 인천대 인문관 1412호 세미나실에서 ‘범선인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범선추)가 정식 발족 - 범선추의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청원서’ 학원 구성원 서명 작업의 시작 - 교수·교사 및 직원들을 설득하여 서명을 받으려는 추진위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학교 사이의 갈등 본격화 	인교협: 제91-29호
------	---------	--------	---	--------------

• 시민준비모임 결성 및 참여

1992	01. 20.	‘시민모임’ 준비위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 이춘직)에서 시민 여론을 주도하는 45명이 참여하여 ‘선인학원 학원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준비위원회(이하 시민모임)’를 결성하고 기자회견 진행, 『선인 학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발표, 인천지역 기자단 약 20명 등 100여 명이 참석 - 다음 내용 발표 “첫째, 선인학원 정상화 없이는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선인학원은 11년째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셋째, 그동안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헌신해 온 교수·교사·학생들의 희생을 막고, 11년째 파행적 상태로 운영되어 인천교육의 암적인 요소인 선인학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인천시민 전체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관계당국에게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01. 31.	교협과 시민 모임 연합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체제는 섭리회 수녀원(동구 송월동)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통해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의 기본 방향과 골격 결정, 「시민의 모임」 인사, 『교협』 및 『교사추진위』의 교수 및 교사, 인천대 총학생회 간부 그리고 『전교조』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 	
	02. 15.	선인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모임 주도로 선인학원 정상화의 궁극적 목표를 선인학원의 국립화 또는 시립화로 설정하고 10만 시민 대상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돌입 - 인천대 총학생회 간부, 교사추진위 교사, 교협은 회장단 중심으로 인천 시내 여러 성당에서 신부님들의 적극적 후원으로 일요 미사 후 서명 활동 전개 - 이후 4월 중순까지 「10만인 서명운동」이 성당과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70,000명 선에 육박 	
	0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결의대회」 및 선인학원 각급 학교 졸업생들의 공동성명서 발표(학생 및 시민 2,000여명이 참가), 교협 대표로 장학식 교수 등이 참여하여 시민들과 선인학원 정상화 결의를 다짐 	
	04. 24.	선인학원 기금 관련 보고서와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24. 오후 2시 주안 1동 성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인학원 기금 78억 원이 백인엽에 건네진 경위 및 선인학원 국가헌납 과정에 관한 진상 보고서」와 관련 성명서 발표, 주요 일간지 기자 10여명과 교수·교사 및 학생 등 약 80여 명이 참석 	

			<p>1)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국가 헌납과정</p> <p>2) 횡령 등으로 부정 축재한 백인엽 개인 재산의 선인학원 기증 과정</p> <p>3) 재단 이사회와 백인엽의 유착관계를 단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78억 원 진상 <i>"78억 원의 유출결정이 '90. 08. 16.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지난 수년간 백씨와 극소수 핵심 추종 세력들이 우리 학원에서 올바른 언론과 양심 인사들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광분해 온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i>고 전제 > 현 재단 이사진의 총 사퇴와 형사처벌 등을 요구</p>	
04. 28.	실행위원회 구성		<p>- 「선인학원사태를 우려하는 인천 시민의 모임」 조직 결성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모임 개최, 안건 토론에서 각계 대표 6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각 분야별로 17명을 실행 위원으로 위촉</p> <p>- 이진 목사 사회로 최원식 준비위원장과 장학식 교협 신임회장의 인사, 장석우 교수의 선인학원 상황보고, 정희윤 간사장의 04. 24. 기자회견 관련 내용 보고로 진행</p>	

- 교육부 선인재단 감사, 및 관선이사 파견
- 이사회는 부총장을 임명하고 총장직무대행을 맡겼으나, 교협은 학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장직 선출을 요구, 전 교협회장이었던 장학식 교수가 총장으로 취임

1992	04. 17.	선인학원에 대해 교육부의 종합감사 시작	<p>- 4월 중순 경 정부 고위 관련기관 사이에서 선인학원에 대한 '철저한 종합감사' 원칙이 결정되어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게 직접 시달, 교육부는 최상택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감사팀을 구성하여 종합 감사팀을 04. 17. 선인학원에 파견</p> <p>- 하루 전 04. 16. 저녁 6시경 종합감사팀 파견 소식 전달, 교협 임시 사무실에서 시민의 모임, 교협 및 교사추진위의 연석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고 상황 분석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선인학원의 부정을 덮어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p>	
	06. 10.	관선이사 파견	<p>-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선인학원의 임원(이사) 7명의 취임 승인 취소와 새로운 관선이사(임시이사) 9명의 파견을 발표 <i>"관선 이사진의 인선 기준으로서 1) 학내 문제로 야기된 오랜 학내 소요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대학인 전체가 합심, 대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2)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 경험 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을 인천 지역에서 신망 높고 어느 일방의 의견에 편중되지 아니하며, 학교 법인 "선인학원 정상화 의지가 확고한 인천지역 인사들을 분야별로 엄선, 임시 이사로 선임하였다"</i></p> <p>- 인천대 교수협의회, 『시민의 모임』, 「교사협의회」 및 인천대총학생회 등은 관선 이사의 파견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p>	

06. 11.	관선 이사회의 첫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선이사회에 인천대 교수협의회 교수 및 「교사협의회」 교사, 인천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 1) 인천대 및 전문대의 총·학장 등 모든 보직자를 전부 교체, 법인 사무국 국장 등 주요 간부를 전원 교체, 산하 초·중·고교장 중 비리 사실이 밝혀진 교장들을 즉시 인사조치 2) 징계된 교수 및 교사를 즉시 복직시키고 제적 처리된 학생(인천대 5명, 전문대 2명)들을 즉각 복교 3) 퇴임한 이사들이 제36차 이사회 (06. 01.)에서 불법적으로 처리한 인사 조치를 전면 백지화할 것 등 	"
06.30	전임 교협회장 재심청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 30. 장석우 전임 교협회장이 관선 이사회에 「징계사안 재심 청원」을 제출 - 관선이사 중 교육부 측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은 “교육부의 재심 결정이 해임으로 되었고 장 회장이 이미 행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니 소송 결과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로 이사회에서 논의 거부 	
07. 27	제42차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선 이사진은 재단과 인천대 및 전문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리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에 착수 - 인천대 장윤익 총장과 전문대 홍순천 학장에게 일단 자진 사퇴를 권유하였으나 거부 - 0. 27. 제42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07. 28. 장윤익 총장과 구해림 재단 사무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 시작 - 이에 따라 이종렬 부총장이 총장 직무 대행 직을 수행하나, 이후 관선 이사진에서 이 부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자 09. 16. 보직 사퇴서 제출 	"
09. 16.	제50차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0차 이사회에서 인천대 총장의 선출 문제를 논의하지만, 총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부총장』을 선출하여 총장직무대행직을 맡기기로 결정 -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서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교협 회장인 장학식 교수를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명해 주도록 요구, 그러나 교육부 측 추천 이사들은, “그럴 경우 교수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
09. 24.	보직 개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1차 이사회에서 신임 부총장의 선출 작업 진행, 9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투표까지 진행 - 5 : 4의 차이로 조재두(趙在斗) 교수를 부총장으로 선출하고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 - 조재두(趙在斗) 총장직무대행은 9월 24일과 25일에 걸쳐 전면적인 보직 개편 - 교무처장 정천구 교수(정치외교학과), 학생처장 민용규 교수(무역학부), 기획처장 안경수 교수(토목공학과) 사무국장 이승문 등을 비롯하여 대학원장급과 학장급 대부분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로 구성 	"

1993	02. 26.	제61차 이사회	- '93. 02. 26. 제61차 이사회에서 장학식 교수를 부총장으로 선출하고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 장학식 교수는 당일 임명장을 부여받고 우선 처장급을 개편 - 교무처장에 황규복 교수(수학과), 학생처장에 안경수 교수(토목공학과), 기획처장에 권영웅 교수(건축공학과)를 임명	"
	05. 12.	교협, 정식 총장 선출 요구	- 교수협의회(회장 강 광 교수)는 05. 12. 관선 이사진에 대해 학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식 총장 선출을 강력히 요구	"
	06. 03.	교협, 총장 선거를 실시하여 장학식 후보 선출	- 05. 24. 관선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05. 30. 이후로 늦출 것을 인천대에 요구 - 06. 03. 인천대 교협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 재직 교수 168명 중 146명이 참석하여 116명(79.5%)의 찬성으로 장학식 총장 직무대행을 총장 후보로 선출 - 06. 14. 관선 이사회는 제69차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였고, 06. 15. 장학식 교수가 제3대 총장으로 취임	

- 전임 이사진 소송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선인재단 비리 검찰 고소 및 고발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하여, 본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 탄원서 제출

1992	07. 10.	전임 이사진 소장 제출에 대한 탄원서 제출	- 07. 10. 전임 이사 7명(김종세, 박일재, 오영식, 육진성, 이윤우, 정상천, 한 수)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처분 효력정지 명령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 이 소송에서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 관선이사가 물러나고 전임 이사진이 다시 직무를 수행 - 교육부 및 관선이사진이 불리하다는 소식에 교협과 선인학원 구성원은 선인학원 산하 교수·교사 및 직원 일동 명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08.10.)	
------	---------	-------------------------	--	--

- 선인재단 정상화 및 대학 민주화에서 최종 목표를 국공립화로 있으며, 결국 1993년 최기선 시장 취임 후 시립화 준비, 인천시의 인수기획단에 대응하여 교협을 중심으로 인계기획위원회 발족, 발전계획안 준비

1992	01. 22.	인천대의 국·공립화 주장	- 경인매일 기사 “선인학원 학원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준비위원회’의 인천대의 국립화 또는 시립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인천대의 국·공립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터 시도 가운데 유독 인천시에만 국·공립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성은 충분하다. 인천대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인천대의 국·공립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인매일 92. 01. 22. 기사
1993	05.	「선인학원시립화 추진기획단」 출범	- '93. 03. 05. 최기선 시장이 취임 - 05. 01. 「시민의 모임」 관계자 6인 (김병상 신부, 오경환 신부, 황규록 목사, 이규학	"

			<p>목사, 최원식 교수, 정희운 간사)은 노창현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시장실을 공식 방문, 선인학원문제가 인천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임을 지적하고, 선인학원 시·공립화가 이루어지기를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05. 11. 오후, 최기선 시장은 기자 회견의 형식을 빌려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공식 선언 <i>"나는 지금 선인학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나는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학교시설을 실제로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상태입니다. 나는 그 곳이 과연 학교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문민 시대를 맞아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인천의 발전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i> - 이철규 기획관리실장에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 인천시 인수 절차 진행 : 인수계획서 제출(인천시) ⇒ 이사회 검토(교육부와 협의) ⇒ 이사회 검토(교육부와 협의) ⇒ 교육부 장관 인가 ⇒ 법인 해산과 청산인 구성 ⇒ 청산 종결 	
	09.	「인계기획위원회」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인수기획단에 대응하여 인천대의 시립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 이 위원회는 정상화에 적극 참여한 교협 소속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장석우 교수(단장)과 7명의 교수(허명재, 강현철, 김영관, 김영선, 윤용만, 윤찬원 등)로 구성 - 시립화에 따르는 현안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는 한편 '93년 11월부터 '94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인천대학교 장기 발전계획안(1994~2003)을 마련 	"
1994	01. 15.	선인학원의 해산, 설립자 변경 인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01. 15. 교육부로부터 설립자 변경 인가 승인 - 01. 26. 제81차 이사회를 소집하고 선인학원의 해산을 위한 몇 가지 사안을 심의·의결 -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설립자변경인가는 받았지만 시립화를 위해서 교육공무원 정원 확보가 필요 <i>".....다만, 위 학교의 교육공무원 정원이 '94. 02. 28. 까지 확보되지 못 할 경우에는 동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i> 	"
1995	04. 26.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신청일: 95. 04. 26. - 가입승인일: 95. 05. 13. 	교수협의회보 제2호 : 7쪽

3. 송도캠퍼스 이전 및 전문대 통합, 국립대 법인화 논의

- 송도캠퍼스 이전, 전문대 통합, 국립대 법인화 논의가 맞물려 일어남

1995	06. 08.	제 1학기 정기총회	<p>- 캠퍼스 이전투표 결과: 총 투표자 104명, 이전 찬성 20명, 이전반대 81명, 무표 3명</p> <p>- 대학 운영방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합의서 채택</p> <p>1) 현 도화캠퍼스는 대학발전의 공간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대학집행부가 인천시에 건의한 캠퍼스이전 건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p> <p>2) 대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특별법인화가 필수적이다.</p> <p>3) 전문대학과의 통합은 우리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협의회는 이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p> <p>4) 현행 교수평가제는 많은 단점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들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대학당국과 교협이 마련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평가제가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전면 백지화한다.</p>	교수협의회회보 제2호 : 6쪽
------	---------	------------	---	------------------

가. 전문대 통합 관련

- 전문대의 산업대학 전환 반대

1996	06. 10.	시립대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	- 교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대학들의 문제점, 인천의 교육 수요, 재정문제, 인천대학의 통합 추진 가능성 등을 들어 산업대 개편안을 반대, 운영위원들도 이에 대해 대체로 공감	교수협의회회보 제4호 : 6쪽
	09. 13.	시장에 건의	- 인천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하려는 논의에 대한 (반대)건의문을 시장, 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	인교협 96-41 또는 96-42, 자료 소실
	12. 16.	산업대로 개편에 대한 건의문	-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 - 그럼에도 [인천산업대학교 설립동의안]이 전격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인교협 96-53
	12. 18.	교협임시총회	-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 시도에 대한 대책 회의 - 경인, 기호일보에 「시립 인천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에 대한 입장」 게재 - 시립대 운영위원회에 위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인교협 96-54 교수협의회회보 제4호 : 10쪽
	12. 18.	전문대 통합 반대 입장문	- 전문대의 산업대로의 전환은 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 - 산업대학 신설은 인천의 교육 수요와 맞지 않음 - 전문대의 산업대 전환은 두 시립대학의 질적 저하를 고착시킬 우려가 큼 - 시의회는 [산업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 인천지역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 시립인천전문대학교의 산업대학교로의 개편에 따른 설립자의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함 	
1997	06. 24.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 교내 고등교육위원회와 연석으로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 시도에 대한 대응책 논의	
	07.	산업대로의 개편에 대한 건의문	- [인천산업대학교 설립동의안] 개편계획의 문제점 제출	인교협 97-09
	08. 03.	전문대학과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과의 통합에 관한 질의 - 인천시립대학운영위원회 자문연구팀의 '인천시립대학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 문제점 지적 -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전문대학의 산업대학 편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책임자 문책, 향후 학교 집행부의 대응 방안 요청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5쪽
	12. 16.	산업대로 개편에 대한 건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 - 그럼에도 [인천산업대학교 설립동의안]이 전격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인교협 96-53
	12. 18.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 시도에 대한 대책 회의 - 경인, 기호일보에 「시립 인천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에 대한 입장」 게재 - 시립대 운영위원회에 위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인교협 96-54 교수협의회보 제4호 : 10쪽
	12. 18.	전문대 통합 반대 입장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의 산업대로의 전환은 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 - 산업대학 신설은 인천의 교육 수요와 맞지 않음 - 전문대의 산업대 전환은 두 시립대학의 질적 저하를 고착시킬 우려가 큼 - 시의회는 [산업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 인천지역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 시립인천전문대학교의 산업대학교로의 개편에 따른 설립자의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함 	
1997	06. 24.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 교내 고등교육위원회와 연석으로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 시도에 대한 대응책 논의	
	07.	산업대로의 개편에 대한 건의문	- [인천산업대학교 설립동의안] 개편계획의 문제점 제출	인교협 97-09
	08. 03.	전문대학과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과의 통합에 관한 질의 - 인천시립대학운영위원회 자문연구팀 '인천시립대학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 문제점 지적 -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전문대학의 산업대학 편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책임자 문책, 향후 학교 집행부의 대응 방안 요청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5쪽
	09. 15.	전문대학과의 통합	- 전문대학과의 통합에 관한 교수 설문조사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6쪽

	12. 11.	전문대학과의 통합	- 조건부 확대 개편 발전 방안에 대한 질의 - 병설안이 확대 개편안으로 바뀐 이유와 배경 설명 및 책임소재 규명, 전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한 조건부 확대 개편안에 대한 결정 등을 요구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19쪽
1999	02. 25.	전문대학과의 통합	- 확대 개편에 따른 인천전문대학과의 합의서에 인천전문대 교원의 특별 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을 건의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21쪽
	03. 11.	전문대학과의 통합	- 전문대학과의 통합에 관한 전체교수회의 소집 요청 - 확대 개편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교수회의의 재요청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22쪽
	09. 14.	전문대학과의 통합	- 확대 개편 무산에 즈음한 교수협의회 견해 성명서 - 확대 개편 무산에 대한 통합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인천광역시, 시립대학운영위원회, 대학 집행부에 대한 책임 추궁 및 대학발전에 대한 민주적 대안 마련 촉구	(7대)확대개편무산-성명서

• 법인화와 함께 전문대 통합 논의 다시 부각

2009	04. 17.	전문대 통합 관련 소책자 작성 및 배포	- “전문대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으로 총 19쪽 분량 소책자 작성 및 배포	소책자. 목차 : 상동, 15쪽
2009	06. 12.	통합 관련 토론회 및 찬반투표에 대한 교협의 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	- 토론회에 교협의 추천하는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야 함 - 통합 관련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 방식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되어야 함	공문 : 상동, 32쪽
	06. 18. ~09. 01.	웹진 검토 문건 발송	- 웹진을 통해 14회에 걸쳐 통합의 득실을 검토하는 문건을 전체 교수에게 발송	
	08. 24.	교협의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	- 통합 관련 2차 토론회 및 통합 찬반투표에 대한 교협의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 > 토론회 진행 방식의 변경을 요구 > 찬반투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체 교수에게 통보할 것을 촉구	공문 : 상동, 37쪽
	08. 26.	통합 관련 2차 토론회에 발제자 추천	- 교수협의회는 2차 토론회에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함.	

08. 31.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찬반투표에 대한 교협의 요구와 결의를 성명서로 발표 >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 > 교수와 직원의 투표 결과를 따로 처리할 것 > 교수 투표에서 부결되면 통합신청서 제출을 포기할 것 	<p>성명서 : 상동, 38쪽</p>
09. 03.	교협 의견 메일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교협의 의견을 이메일로 전체 교수에게 전달 > 통합 찬반투표 결과를 교협은 겸허하게 수용함 > 이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문제점 지적과 교협의 요구사항 	<p>관련 문건 : 상동, 39쪽</p>

나. 송도 이전 및 부지 갈등

- 초기에는 송도 이전 반대, 송도 이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전 대상 부지의 면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 1) 전문대학과 이전을 하면서 전문대학의 부지 관련 마찰,
 - 2) 도화동(제물포 캠퍼스) 부지 개발에 대하여 시와 마찰 발생 - 도화동 개발 이익을 학교의 발전 재원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
- 관련하여 시장 면담 등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공문 발송,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

2004	06. 07.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2. 이전에 따른 대학 부지와 재산권의 문제 > 최대한 대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 이전조건의 충족 + 개발순이익의 50%이상 보장 > 영종도 부지의 개발권 문제 > 인천시와 학교집행부에 요구할 내용 정리 후 전달방법 논의 * 6월에 인천시장 면담 요청-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한 교수협회의 의견 전달	
2004	06. 22.	제안 및 결의서	- 전문대학 및 송도 이전 관련 결의서 발표 하나.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마저도 저버린 전문대학은 각성하고, 진정 지역사회와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자각하라! 하나. 인천시는 2001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전문대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강제로 조정하려는 행정 편의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시는 2008년 계획된 대학의 송도이전이 계획된 규모와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한 캠퍼스 조성과정에서의 감리권을 대학에 보장하고, 대학이 이전 후 도화지구 개발 순이익의 절반이상을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라!	
2004	06. 28.	기자회견문	- “올바른 인천대학의 송도이전 보장과 인천 고등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인천대학교 구성원 일동” 이름으로 다음 내용 중심의 기자회견문 작성 >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은 새로운 대학캠퍼스 조성을 넘어선 인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사업임 > 양 대학의 부지문제는 2001년 4자 합의로 이미 정리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전문대학은 각성하고, 진정 지역사회와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각해야함 > 인천시는 2001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전문대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 강제로 조정하려는 행정 편의적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함 > 인천시는 2008년 계획된 대학의 송도이전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캠퍼스 조성과정에서의 감리권을 대학에 보장하고, 대학이 이전 후 도화지구 개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해야 함	

2005	05. 06.	송도 이전에 관한 교수협의회 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이전에 관한 서신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이전에 관해 인천시가 충실히 계획대로 이전과 신 캠퍼스의 건축을 전체적으로 책임진다는 사실을 문서상으로 명백히 보장한다면 새로운 합의조건으로 고려 가능 > 본 대학보다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의 입지와 발언권이 더 중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대학의 부실한 캠퍼스 조성은 불 보듯 명백한 일이지 대학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 따라서 교수협회의회는 다음 주 초반에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 	
	05. 16.	인천광역시장 면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과 면담 요청 	공문
	05. 26.	인천 시장 면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한 교수협회의회의 의견 전달하고 인천광역시장과 면담 요청 	공문
	06. 22.	제안 및 결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이전과 관련한 결의문 작성, 인천시장에게 공문으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마저도 저버린 전문대학은 각성하고, 진정 지역사회와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자각하라! > 인천시는 2001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전문대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강제로 조정하려는 행정 편의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인천시는 2008년 계획된 대학의 송도 이전이 계획된 규모와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한 캠퍼스 조성과정에서의 감리권을 대학에 보장하고, 대학이 이전 후 도화지구 개발 순이익의 절반이상을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라! 	
	06. 27.	송도 이전 관련 교수협의회 의견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이전과 관련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5. 06. 22 자 결의문을 첨부함 	공문
	06. 28.	기자회견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기자회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인천대학의 송도 이전 보장과 인천 고등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인천대학교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일동 성명서 발표 - 기자회견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은 단순히 새로운 대학캠퍼스 조성을 넘어선 인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사업임 > 양 대학의 부지문제는 2001년 4자 합의로 이미 정리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전문대학은 각성하고, 진정 지역사회와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각해야함 > 인천시는 2001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전문대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일방 	



















































































			<p>적으로 수용, 강제로 조정하려는 행정 편의적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는 2008년 계획된 대학의 송도 이전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캠퍼스 조정과정에서의 감리권을 대학에 보장하고, 대학이 이전 후 도화지구 개발 순이익의 절반이상을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해야 함 > 올바른 인천대학의 송도 이전 보장과 인천 고등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인천대학교 구성원 일동 - 	
08. 02.		<p>교수협회의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통보</p>	<p>교수협회의회의 질의답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4자 합의서에 명시된 57,000평의 전문대 부지가 67,000평의 결정된 배경과 추가로 이관될 대학부지의 손실분에 대한 대책은? 2004년 대학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인천전문대를 도화5거리 서쪽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 도출, 인천전문대 교지재배치와 지역사회 여론 및 도화동캠퍼스 주변 개발을 통해 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면적 > 대학 이전 시, 계획 중인 교사의 규모가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전체 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대학의 시설규모는 대학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거하였으며 개략적인 전체시설은 대학규모에 적합하도록 마스터플랜용역에서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세부시설은 용역사에서 작성 중 > 대학 이전을 위해 계획된 규모의 부지와 인천시가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 보안 방안은? 05. 07. 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대학교총장, 인천전문대학장이 서명한 교지조정 합의서에는 송도신도시 156,47평에 교사 50,000평으로 대학을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됨. 대학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체결될 약정서에 송도 신캠퍼스의 감리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예정임 > 도화지구 개발에 따른 순이익의 절반이상을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은? 	





















다. 국립대 법인화 전환

1) 법인화 반대 운동 전개

- 법인화가 아닌 국립대 전환 추진, 반대 성명서, 1인 시위, 시립대운영위 규탄 등 진행
- 법인화 관련 설문 진행 - 초기 설문에서는 법인화가 전제라면 국립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 당시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 계획과 함께 국공립대 교수회 등 교수 및 직원 단체와 연합하여 법인화 반대

2004	06	규탄 성명서 발표	- 법인화가 아닌 국립화를 위한 시립대 운영위 규탄 성명 발표 <i>오만한 시립대운영위와 무책임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대학발전은 법인화가 아닌 국립대가 바른 대안이다.</i>																												
2004	07.	국립대 법인화 의견 조사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론 >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대부분임 > 체계적으로 대응 필요 > 정보를 모든 회원들이 공유 >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방향 결정 > 거점 대학과 특수목적 대학의 입장 차이 조절 [법인화 방법] > 단위 대학들의 이해가 다른 대학 총장들의 의지가 중요 > 법인화의 목적과 법인화가 그 목적 달성에 유일한 방안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교육부와 대학의 쌍방향 의사소통, 교육부와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의 수립 필요																												
	09. 12 ~30.	교협운영위원회 설문조사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설문조사</p> <p>◆ 1. 인천대학의 법인화를 전제로 한 국립대전환에 찬성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예</td> <td>24</td> <td>25%</td> <td></td> </tr> <tr> <td>아니오</td> <td>71</td> <td>74%</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1</td> <td>1%</td> <td></td> </tr> </table> <p>◆ 2. 만약 교육부가 법인화를 조건으로 국립대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대응을 택하시겠습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국립화를 포기하고 현재의 시립대 체제로</td> <td>57</td> <td>59%</td> <td></td> </tr> <tr> <td>남아 다른 발전 방안 모색</td> <td>36</td> <td>38%</td> <td></td> </tr> <tr> <td>법인화를 받아들이고 국립화를 추진</td> <td>3</td> <td>3%</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3</td> <td>3%</td> <td></td> </tr> </table>	예	24	25%		아니오	71	74%		No Answer	1	1%		국립화를 포기하고 현재의 시립대 체제로	57	59%		남아 다른 발전 방안 모색	36	38%		법인화를 받아들이고 국립화를 추진	3	3%		No Answer	3	3%	
예	24	25%																													
아니오	71	74%																													
No Answer	1	1%																													
국립화를 포기하고 현재의 시립대 체제로	57	59%																													
남아 다른 발전 방안 모색	36	38%																													
법인화를 받아들이고 국립화를 추진	3	3%																													
No Answer	3	3%																													

		<p>◆ 3. 현재 논쟁중인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td> <td>10</td> <td>10%</td> <td></td> </tr> <tr> <td>반대</td> <td>84</td> <td>88%</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2</td> <td>2%</td> <td></td> </tr> </table> <p>◆ 4-1. 반대할 경우 어떤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들인지 순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순위</p> <table border="1"> <tr> <td>신분변화</td> <td>34</td> <td>35%</td> <td></td> </tr> <tr> <td>재정확보 문제</td> <td>32</td> <td>33%</td> <td></td> </tr> <tr> <td>등록금 인상</td> <td>3</td> <td>3%</td> <td></td> </tr> <tr> <td>총장의 간선</td> <td>3</td> <td>3%</td> <td></td> </tr> <tr> <td>강제 구조조정</td> <td>15</td> <td>16%</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9</td> <td>9%</td> <td></td> </tr> </table> <p>◆ 4-2. 반대할 경우 어떤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들인지 순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순위</p> <table border="1"> <tr> <td>신분변화</td> <td>17</td> <td>18%</td> <td></td> </tr> <tr> <td>재정확보 문제</td> <td>40</td> <td>42%</td> <td></td> </tr> <tr> <td>등록금 인상</td> <td>10</td> <td>10%</td> <td></td> </tr> <tr> <td>총장의 간선</td> <td>9</td> <td>9%</td> <td></td> </tr> <tr> <td>강제 구조조정</td> <td>10</td> <td>10%</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10</td> <td>10%</td> <td></td> </tr> </table> <p>◆ 4-3. 반대할 경우 어떤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들인지 순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순위</p> <table border="1"> <tr> <td>신분변화</td> <td>12</td> <td>13%</td> <td></td> </tr> <tr> <td>재정확보 문제</td> <td>8</td> <td>8%</td> <td></td> </tr> <tr> <td>등록금 인상</td> <td>26</td> <td>27%</td> <td></td> </tr> <tr> <td>총장의 간선</td> <td>12</td> <td>13%</td> <td></td> </tr> <tr> <td>강제 구조조정</td> <td>28</td> <td>29%</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10</td> <td>10%</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그래프로 보기</p> <p>◆ 4-4. 반대할 경우 어떤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들인지 순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순위</p> <table border="1"> <tr> <td>신분변화</td> <td>14</td> <td>15%</td> <td></td> </tr> <tr> <td>재정확보 문제</td> <td>4</td> <td>4%</td> <td></td> </tr> <tr> <td>등록금 인상</td> <td>18</td> <td>19%</td> <td></td> </tr> <tr> <td>총장의 간선</td> <td>31</td> <td>32%</td> <td></td> </tr> <tr> <td>강제 구조조정</td> <td>18</td> <td>19%</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11</td> <td>11%</td> <td></td> </tr> </table>	찬성	10	10%		반대	84	88%		No Answer	2	2%		신분변화	34	35%		재정확보 문제	32	33%		등록금 인상	3	3%		총장의 간선	3	3%		강제 구조조정	15	16%		No Answer	9	9%		신분변화	17	18%		재정확보 문제	40	42%		등록금 인상	10	10%		총장의 간선	9	9%		강제 구조조정	10	10%		No Answer	10	10%		신분변화	12	13%		재정확보 문제	8	8%		등록금 인상	26	27%		총장의 간선	12	13%		강제 구조조정	28	29%		No Answer	10	10%		신분변화	14	15%		재정확보 문제	4	4%		등록금 인상	18	19%		총장의 간선	31	32%		강제 구조조정	18	19%		No Answer	11	11%		
찬성	10	10%																																																																																																													
반대	84	88%																																																																																																													
No Answer	2	2%																																																																																																													
신분변화	34	35%																																																																																																													
재정확보 문제	32	33%																																																																																																													
등록금 인상	3	3%																																																																																																													
총장의 간선	3	3%																																																																																																													
강제 구조조정	15	16%																																																																																																													
No Answer	9	9%																																																																																																													
신분변화	17	18%																																																																																																													
재정확보 문제	40	42%																																																																																																													
등록금 인상	10	10%																																																																																																													
총장의 간선	9	9%																																																																																																													
강제 구조조정	10	10%																																																																																																													
No Answer	10	10%																																																																																																													
신분변화	12	13%																																																																																																													
재정확보 문제	8	8%																																																																																																													
등록금 인상	26	27%																																																																																																													
총장의 간선	12	13%																																																																																																													
강제 구조조정	28	29%																																																																																																													
No Answer	10	10%																																																																																																													
신분변화	14	15%																																																																																																													
재정확보 문제	4	4%																																																																																																													
등록금 인상	18	19%																																																																																																													
총장의 간선	31	32%																																																																																																													
강제 구조조정	18	19%																																																																																																													
No Answer	11	11%																																																																																																													

			<p style="text-align: right;"> 그래프로 보기</p> <p>◆ 4-5. 반대할 경우 어떤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들인지 순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신분변화</td> <td>10</td> <td>10%</td> <td></td> </tr> <tr> <td>재정확보 문제</td> <td>4</td> <td>4%</td> <td></td> </tr> <tr> <td>등록금 인상</td> <td>28</td> <td>29%</td> <td></td> </tr> <tr> <td>총장의 간선</td> <td>29</td> <td>30%</td> <td></td> </tr> <tr> <td>강제 구조조정</td> <td>16</td> <td>17%</td> <td></td> </tr> <tr> <td>No Answer</td> <td>9</td> <td>9%</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그래프로 보기</p>	신분변화	10	10%		재정확보 문제	4	4%		등록금 인상	28	29%		총장의 간선	29	30%		강제 구조조정	16	17%		No Answer	9	9%		
신분변화	10	10%																										
재정확보 문제	4	4%																										
등록금 인상	28	29%																										
총장의 간선	29	30%																										
강제 구조조정	16	17%																										
No Answer	9	9%																										
<p>2004</p> <p>10. 27.</p>	<p>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p>		<p>1. 국립대 전환과 법인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집행부의 입장(추진단, 집행부) > 현재 7개 교수단체가 전부 반대 결의하여 반대운동 전개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교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의 반대집회 진행 : 국공립대교수회와 교수노조에서 법인화 반대 토론회 개최 요청 > 국립화와 법인화 문제에 대한 학내구성원과의 공조: 성명서, 토론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문제 > 대 시민사회 설득 																									
<p>2004</p> <p>-</p>	<p>교협 질의서</p>		<p>- 법인화 관련 교협 질의서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 21. 시장의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시립대 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서면심의하여 결의한 법인화결의에 대한 대학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2. 국립대 전환이 법인화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물론 교육부의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시험모델로 인천대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집행부가 표면적으로는 선 국립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인화를 수용할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배경은 무엇인가? 3. 법인화를 위한 MOU(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인천시가 제시한 법인화 전환 후 10년 200억 발전기금을 제외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운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달라. 4. 인천시가 법인화를 위한 MOU 체결을 서두르는 실제 이유는 현 교육부장관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법인화를 추진하던 책임자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 시기가 1월초 전후라는 것이다. 대학의 운명이 개인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는? 																									

			5. 그 실체도 없는 법인화가 아닌 원래의 목표대로 조건 없는 국립대 전환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가?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를 포함하는 국립대전환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립대전환에 매진할 의향은 없는가?	
2005	09. 20.	전국교수 결의 대회 참여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반대를 위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대회(김철홍 회장 겸 전국교수노조 국공립대 위원장 자격으로 대회 발언 및 행진 참여)	
	09. 05. ~10. 06.	국립대 법인화 저지 순회 투쟁 교육	- 국·공립대 총력 집중 투쟁 순회 교육 참여(교수회장 강사 참여)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단지 법적 지위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변화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총장에 의한 책임경영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장 선출 방식 변화, 국가재정 책임 방기, 학문의 자유와 공공성침해, 등록금 인상, 직원의 구조조정, 학생 수 12,000명 이하 대학 도산 등을 수반하는 사영화 프로젝트 >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임.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인화는 당장 중단되어야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추진할 시, 대학주체들의 대학 사영화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	
	11. 16.	국립대 전환 촉구 성명서	- 대학 구성원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조건 없는 국립대 전환”을 요구, 인천시와 교육부에 방문하여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 -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을 위한 구성원 연대의 요구 1. 교육부는 조건 없는 인천대 국립대 전환 약속 2. 대학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조건 없는 국립대 전환 이루어낼 것 3. 대학구성원과 인천시민의 염원모아, 국립대 전환 이루어낼 것 4. 교육부는 인천대 조건부 법인화 철회하고, 조건 없는 국립대 전환 약속할 것 5. 130만 시민들의 열망이다. 조건 없는 국립대학교 전환 즉각 수용하라	
	11. 17.	전국교수노조의 전국순회토론회 공동주체	-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교육공공성확보 방안	
	11. 17.	교수협의회 토론회	-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 7단체 연대에서 주최한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국립대 법인화의 허실과 교육 공공성 문제 발제 및 토론 - 법인화 관련 신문기사, 토론회 자료정리 등 교수님들께 배부	
	12. 26.	시립대 운영위 규탄성명서	- 규탄성명서 내용 공교육 발전과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조건 없는 국립대 전환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시립대 운영위의 그 실체도 없는 법인화 독단적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운영위와 인천시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 대학집행부는 그 실체도 없는 법인화로 구성원을 호도하지 말고, 구성원에게 밝힌 대로 조건 없는 선 국립대전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지역사회와 공교육 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국립대전환에 지역과 모든 대학구성원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교수협의회는 그 길의 선봉에 설 것이다! *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교수협의회는 인천시청에서의 일인시위, 교육부항의 방문 등 다양한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2005. 12. 26. ~2006. 02. 01.	교수협의회장 1인 시위(5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 시립대 운영위의 법인화 결의 반대 교수협의회장 1인 시위(50일 진행) - 규탄 시위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실체도 없는 국립대 법인화를 대상으로 한 시립대 운영위의 12. 21. 법인화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운영위와 인천시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부의 세습에 이어 교육기회의 세습화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마저도 시장경제논리에 내맡기겠다는 실패한 공교육정책입니다. > 인천대의 법인화는 인천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학원민주화와 공교육의 상징을 실패한 교육부의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와 공교육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국립대전환에 지역과 모든 대학구성원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교수협의회는 그 길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2006	01. 10.	법인화 질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 전환 관련 다음 질의사항 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난해 12. 17. 전체교수회의에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밝힌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보낸 MOU(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사항이 대학도 모르게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같은 날 교수회의에서 교수협의회가 제안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학집행부의 방법과 절차,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16.	법인화 자료집 머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화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에서 교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 안내 	
	02. 01.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청 기사실에서 일방적 법인화 반대와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 기자회견 진행 	
	02. 14.	대학발전을 위한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 02. 14. 본관 7층 회의실, 대학본부, 교협, 인천시, 직원, 학생동문 발제 및 토론 참석 - 교협에서는 일방적 법인화가 아닌 가치 “지역형 공립대학”의 모델 제시 	

2) 법인화에 대한 대응 및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 송도 이전, 법인화 등을 포함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연구보고서 작성
-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서명운동, 법인화 법안 발의 규탄
-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포함하여 법인화 과정에서 인천시의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규탄

2006	04. 19.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 ‘송도 이전 문제, 국립대학 법인화문제 및 교권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3개의 소위원회와 3~5명의 위원 위촉	
	05. 03.	교수협의회 제3차 운영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 - 소위원회 별로 팀장 선정	
	05. 16.	교수협의회 제4차 운영위원회	-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무산 - 소위원회 구성 완료	
	06. 20.	교수협의회 국립대 특수법인화 소위원회 제1차 준비회의	-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관한 연구 분야 및 주제와 방향을 대략적으로 설정 1)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특수법인화의 추진 경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당면 대응 전략 3) 특수법인화의 분야별 향후 대응책 4)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2006 12대 김병욱	09. 12.	소위원회 연구보고서 발표와 토론회를 겸한 임시총회	- 송도 신 캠퍼스 이전 추진 보고서 - 국립대 특수법인전환 관련 연구보고서 - 교권 관련 위원회 연구보고서	
2006	11. 22.	특별법(안) 반대 서명운동	- 국립대법인화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법(안)이 되도록 서명 운동 실시	
2008 14대 최병길	03. 12.	인천시장 규탄 성명서 발표	-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학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규탄.	[정기총회 자료] (09. 03. 24.), 4쪽
	03. 24.	성명서 형식의 신문 광고	- 인천시의 독단적 법인화 추진 및 연세대와의 역차별 규탄 - 성명서를 동문, 학생과 함께 지역 신문에 게재	상동, 5쪽
2008	09. 17.	성명서 발표	- <시립대학통합 및 법인설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천시의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성명서 : 상동, 21쪽
	09. 24.	교협의견서 제출	- 법인화 관련 법안의 제출의 프로세스 및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협의 의견을 학교에 제출	공문 및 관련 문건 : 상동, 23쪽

	11. 14.	의견서 전달	- 국립대학 법인전환 추진 절차 동의와 관련된 교협의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 - 국립대학법인화는 반드시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 -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	공문 및 관련 문건 : 상동, 32쪽
2009	04. 07.	법인화 및 통합 관련 성명서 발표	- 성명서 내용 > 조전혁 의원은 모독적인 <법인화 예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집행부는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 > 타율적이고 비민주적인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서 : 상동, 4쪽
	04. 15.	국립대학 법인화(안)에 대한 교협의 의견서 작성 및 배포	- <조전혁 의원 발의안>의 거버넌스와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우려 - 국립대 법인화(안) 비교표	의견서 : 상동, 6쪽
2009	04. 21.	집행부에 조속한 전체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 총장은 즉시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해 구성원에게 조전혁 의원의 법안에 대한 찬반 의 사를 물을 것 -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밝힐 것	공문 : 상동, 17쪽
	04. 22.	집행부의 연찬회 개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 발송	- 연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 - 이와 같은 소모적 방식을 지양하고 교협이 요구하는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할 것	공문 : 상동, 18쪽
	04. 26.	연찬회 관련 경과 및 문제점을 전체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	- 연찬회 관련 경과 및 문제점을 전체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 > 연찬회는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가 될 수 없음 > 집행부가 주장하는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	이메일 문건 : 상동, 19쪽
	05. 22.	성명서 발표	- 집행부의 비민주적 전체교수회의 진행에 대한 성명서 발표 <i>집행부는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05. 19. 전체교수회의 진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총장은 '총장의 안'을 밝히고 전체 교수에게 무기명으로 찬반을 물어라.</i>	성명서 : 상동, 24쪽
	05. 25.	전체교수회의 관련 총장에게 면담 요청	- 교협 회장단은 05. 19. 전체교수회 관련 교협의 요구에 대한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함.	공문 : 상동, 25쪽
	05. 25.	법인화 관련 발의 보류 요청	- 조전혁 의원에게 법인화 관련 법안 발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 > 지난 전체교수회의는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로 적법한 의견수렴이 될 수 없었음 > 교협은 현재 집행부에 전체 교수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였으니 법안 발의를 보류해 주기 바람	공문 : 상동, 26쪽
	05. 27. ~31.	법인화 추진 절차 관련 전체 교수 의견 조사 실시	- 법인화 추진 절차 관련 전체 교수 의견 조사 실시 > 05. 19. 전체교수회의 의견수렴절차는 정당했는가? > '총장안'에 동의하는가?	안내문 및 결과 발표 자료 : 상동, 27쪽

	06. 04.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청에서 조전혁 의원 법인화법안 국회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 조전혁 의원은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인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총장은 법인화 및 통합의 파행적 추진을 사과하라 > 인천시장은 인천대에 간섭과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 	<p>성명서 : 상동, 30쪽</p>
	06. 25.	교협 의견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전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교협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 > 조전혁 의원 발의안은 교육의 자율권과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임 > 인천대 구성원은 이 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 >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의한 이 안은 폐기되어야 함 	<p>공문 : 상동, 33쪽</p>
	07. 01.	법인화 절차 관련 이메일을 전체 교수에게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화 동의 절차의 문제점 및 통합의 파행적 추진을 우려하는 이메일을 전체 교수에게 발송 > 조전혁 의원 발의안의 정당성 결여 > 전문대와의 통합 추진 방식의 문제점 : 중장기적 대학발전 계획의 부재,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추진, 비민주적 방식, 재정확보 방안의 결여 	<p>관련 문건 : 상동, 34쪽</p>
	07. 03.	교협의견서 공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전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교협의 의견을 국회에 공문을 전달 > 수신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 > 발의안의 문제점 지적과 철회 요구 > 첨부 문건: 교수협의회 성명서 및 관련 기사 등 	<p>공문 : 상동, 36쪽</p>
16대 김내현	10. 29.	법인화 법안 관련 집행부에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재성 의원 법인화 법안 및 국회에서의 법인화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 요청 	<p>공문 : 상동, 40쪽</p>
2011	06. 21.	임시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 따른 교수협의회 의견서 	<p>상동, 12쪽</p>
	06. 28.	국회에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기 원함 - 교수협의회에서 법인 이사 1인을 추천 - 법인이 되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총 6개의 의견 및 건의 사항 	<p>공문 및 의견서 : 상동, 68쪽 이하</p>

라. 국립대학법인 추진 과정

2012	01. 12.	차기회장이 전체교수에게 이메일로 대학 현안을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의 의미와 교협의 과제 -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 법인화 추진 과정의 반성 - 소통과 화합의 문제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자료] (13. 02. 28.), 13쪽
19대 김용민	03. 05.	'국립대학법인 설립 추진 조직구성(안)'에 대한 교협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가 구성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 교협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함 - 구성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선행되어야 함 	공문 : 상동, 16쪽
	03. 19.	'국립대학법인 설립 추진 조직구성(안)'에 대한 교협의 재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선거가 목전에 있는 만큼 조직 구성 등을 차기 총장에게 위임할 것 - 집행부는 총장 선거일정을 조속히 공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에 총장선거를 치를 것 	공문 및 총장의 회신 : 상동, 17쪽
	04. 03.	제1회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설립준비위원회 조직 구성을 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법인화 이후 운영비 지원 확보를 위한 학교의 대책과 그에 대한 교협의 대응 방안 논의 	운영위원회, 간담회 회의록 (2012. 03 -2013. 01) : 상동, 2쪽 이하
	04. 09.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관련 협조문을 구성원에게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총장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의 부당성과 비상식성 - 이 위원회에 참여해주지 않기를 구성원에게 호소 	관련 이메일 : 상동, 21쪽
	04. 10.	교수협의회 제1회 긴급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설립준비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 	상동, 2쪽
	04. 11.	법인 설립 준비 관련 단과대의 위원 추천에 대한 교협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란이 많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은 잠시 보류하고 설립준비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만 추천할 것을 당부 	공문 : 상동, 23쪽

2012	04. 18.	국립대학법인 설립 추진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 교수 분과위원 : 중어중국학과 전인갑 교수 - 교육·연구 분과위원 : 무역학부 옥우석 교수 - 운영체제 분과위원 : 도시행정학과 신종화 교수	공문 : 상동, 26쪽
	05. 25.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 유병국 교수(부회장, 무역학부)	공문 : 상동, 34쪽

마. 법인화 이후 재원 및 부지 문제

1) 이전 이후 부지의 협소함과 제물포 캠퍼스 문제 제기

2010	11. 17.	사범대학 제물포캠퍼스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요망	- 이 문제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함 - 사범대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망	공문 : 상동, 9쪽
2010	10. 12.	인천시에 대학부지 제공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송도 11공구 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가 약속했던 인천대 부지가 확정되도록 할 것 -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와 인천대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개선할 것	성명서 : 상동, 18쪽
2010	12. 16.	<대학통합에 따른 인천시 지원계획>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구성원 기자회견	- 송도 캠퍼스 공간과 시설 부족에 대한 어려움: 총학생회장 - 통합 인천대 지원계획의 당위성: 교수협의회 - 기자회견문 낭독: 단체 대표들	기자회견문 : 상동, 13쪽
2011	04. 27.	대학재산 및 도화지구 재개발사업 협상팀 대표 추천	- 교수협의회 협상 대표: 박창화(부회장)	공문 : 상동, 42쪽
	05. 04.	제물포 캠퍼스 부지에 관한 요청	- 지금까지 대학 측이 취한 행정조치 - 향후의 대응방안	공문 및 집행부 회신(국립대 법인화 추진사항 및 제물포 캠퍼스 부지에 관한 건) : 상동, 44쪽 이하

2) 인천시 지원금 이행 촉구 및 집행부에는 재원확보 요구, 보완협약에 대한 반대

2011	08. 09.	집행부에 현안 사항에 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금 내역 -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금 내역 - 법인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계획 - 총 8개의 질의 사항 	공문 및 질의서 : 상동, 73쪽
2012	04. 12.	총장의 무책임한 대학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약속한 지원계획 등 대학운영과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라 - 직위를 이용한 총장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독선적 대학 운영 방식을 버리고 차기 총장과 협력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 	성명서 : 상동, 24쪽
2012	09. 27.	법인 인천대학 재정확보 대책에 관한 교협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운영비를 대출 받아 충당한다고 보도되었음 - 집행부는 내년 운영비 확보 상황과 대응책을 구성원에게 밝혀주기 바람 	공문 : 상동, 44쪽
	10. 10.	법인대학 재정확보에 무책임한 인천시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빈털터리, 빚더미 법인화 유보하라 - 인천시는 지원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고, 국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함 - 이럴 바에는 안정적 재원과 재산 확보가 보장될 때까지 법인화를 유보하라 	성명서 : 상동, 45쪽
	11. 02.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구성원 5개 단체 참여: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공무원노조 인천대지부, 총학생회, 총동문회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문건 : 상동, 63쪽
	11. 06.	제6회 정기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공청회 토론 교수 추천 무산 	상동, 8쪽
	11. 06.	학내 단체와 연합하여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단체: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 지부, 공무원 노동조합 인천대 지부, 총학생회, 총동문회 - 법인화 및 통합 관련 인천시 지원계획을 시의회 조례로 확약하라 - 700억 이상의 안정적인 국비지원 및 대학 운영비를 보장하라 	성명서 : 상동, 46쪽
	11. 13.	‘비대위’ 주제로 대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인천대 국립대 법인 전환 이대로 괜찮은가?” 	상동, 63쪽

11. 20.	지방일간지에 호소문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단체: 비대위 5개 단체 - 게재 신문: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 제목: 인천시민과 인천의 교육을 위해 비정상적인 인천대 법인화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p>광고 문건 : 상동, 63쪽</p>
11. 21.	기자회견 및 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대 구성원 공동행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 - 이후 시청 앞에서 학생들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시작 	<p>기사 1건, 사진 1건 : 상동, 64쪽</p>
12. 0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초대이사후보추천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보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인천시는 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정 및 재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를 요구 	<p>공문 : 상동, 48쪽</p>
12. 13.	법인 정상화 촉구를 위한 중앙일간지에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협의회는 광고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까지 성금을 모금함 - 총 84명의 교수가 성금에 동참 - 성금 총액: 12,250,000원 - 게재 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 제목: 허울뿐인 인천대학교 법인화, 시작부터 빚내서 대학을 운영하라니? 	<p>광고 기사 2건 : 상동, 64쪽</p>
12. 26.	집행부에 전체교수회의 소집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체제 출범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음 - 집행부는 조속히 전체교수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핵심 사항과 현황을 구성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p>공문 : 상동, 49쪽</p>
01. 04.	2013년 긴급 운영위원회 및 신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협 회장 T브로드 지역방송에서 녹화 - 시장 면담요청 공문 - 법인 진행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가의 문제 - 인천시에서 작년에 인천대 모르게 인천대 설치조례를 폐지 	<p>상동, 9쪽</p>
2013 01. 07.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단체 : ‘비대위’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공무원노조 인천대지부, 총학생회, 총동문회) - 대학발전을 위한 교과부의 실질적 지원이 없고, 인천시의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인화는 유보되어야 함. 	<p>기자회견 : 상동, 50쪽 이하 사진 1매 : 상동, 65쪽</p>
01. 18.	‘비대위’ 총장실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재산 협상에 대해 항의 - (이날이 법인화 날짜) 	<p>사진 1매 : 상동, 65쪽</p>

2013	01. 30.	인천시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정서'에 대한 교협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서'를 조례로 제정하든가 그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후속 협상을 재개하여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할 것 - '협정서' 2항, 차입금에 관한 내용을 재협의할 것 	공문 : 상동, 57쪽
2013	12. 22.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6항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송도 11공구 10만 평을 조성원가로 2017년까지 인천대에 제공하게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준비와 대응, 향후 대책을 알려주기 바람 	공문, 집행부 회신
2014	01. 28.	국립대법인 1주년 기념 격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출연금 0원 - 속빈 강정인 국비 성과 사업비 - 생색만 내는 기숙사 건립지원금 - 퇴보하는 복지 - 교협에서는 국립대법인 출범 1주년을 맞아 1년을 뒤돌아보고 향후 과제에 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전체교수토론회를 제안하여 동의를 얻음 	
2014	04. 08.	법인화 1주년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민주적 운영과 제도 확립 - 재산 현황 조사 및 평가 - 안정적 국가 출연금 확보와 학교 발전 계획 - 교직원 인사와 권익 및 복지 향상 분야 - 기타 (편제 개편, 정원감축, 인천시 재정지원 조례) 	
2014	06. 30.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에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 달 치가 미집행 될 시 전입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난파 직전 재정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 - 과거 시정부가 약속한 대학 지원계획을 재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인천대에 대한 국가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함 	
2014	10. 28.	제11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시 지원금, 국고확보 문제, 재산과 신축 건물관련 현안: ⑧: 획기적 대책 필요 (정부와 MOU 개정 협약 체결 요구)⇒ 박종돈(팀장), 서태일, 신광섭, 김민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전입금 300억 ⇒ 150억으로 50% 감축 통보 > 재정 담당부총장, 사무처장 부재 > 국고 : 102억(성과금), 출연금 0원(서울대 4083억) > 신축건물 : 학교 예산으로 건설 중(도개공은 학교가 기채하면 이자만 지급제안) > 법인화시 대발위 경과보고와 시 지원금 중간평가 약속 이행 사항 : 산학협력지원금(3,067억), 104억 시립대 발전기금, 94억 대우 기금(동통대) - 제물포 캠퍼스 활용(6만 7천 평)과 재산정리 문제 : 10만 평 +a 	정기총회자료집

2015	05. 21.	제17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물포 캠퍼스 및 재산 찾기 과정과 재정 운영 관련 문제 - 2018년 국가 출연금 대비해서 적자 예산 편성해야 함. - 재산문제 : 지난 3년간 진척된 것이 없고 의지도 부족함. - '인천시 지원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06. 15.) 	
	11. 05.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경영의 법적 책임이 있는 국립대학법인 이사회는 조속히 재정 위기 해결해야 이사회는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오늘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함 - 인천시는 약속한 300억 재정지원과 기금들의 반환을 조속히 이행 - 재정위기 해결을 못하면 총장과 집행부는 총사퇴 - 이사회를 구성한 인천시, 중앙정부, 동문회, 그리고 총장, 부총장과 학내 이사들은 조속히 학교 재정을 정상화 시켜 학생들이 강의실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다할 것을 요청 	
	11. 24.	제22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재정위기와 기금회수 문제 <p. 3>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이사회는 책임지고 조속히 재정 위기 해결하라! <11. 05. 성명서> 인천시 정리추경예산에 150억 인천대 운영비 반영 금년도 분 300억 은행 운영비 차입금 인천시 미승인 ⇒ 향후 심각한 문제 예상 기금 및 재산 찾기 문제 미해결 상태 지속 : 현 총장 체제에서 해결 난망 ⇒ 무능력, 무책임으로 미해결 상태 지속 중 	정기총회자료집
2016	11. 09.	제2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 재정 정상화 대책위원회 성명서 및 기자회견 참여 여부: 가결 	상동 3쪽
2017	12. 22.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6항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송도 11공구 10만 평을 조성원가로 2017년까지 인천대에 제공하게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준비와 대응, 향후 대책을 알려주기 바람 	공문 : 상동 39쪽 집행부 회신 : 55쪽 이하
2018	04. 10.	차입금 이자를 학교가 상환하는 문제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대출금 이자 상황을 놓고 교육부와 인천시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음 -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학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과 교육부 및 인천시의 적극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이 성명서는 [2019년 정기총회] 자료집에 누락되어 있음
2019	07. 16.	인천대학교 토지 매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01. 17. 체결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인천대학교는 송도 바이오단지 토지 매입 중 - 그러나 협약과는 달리 토지 매입 면적이 축소되어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바 인천시로 부터의 토지 매입지원금 이용 등 재산 협상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 	전체교수회-74 (2019.07.16.)

08. 29.		<p>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재정 및 재산 관련 지원 보완 협약에 대한 교수회 입장 발표</p>	<p>“받아야 할 재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타결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 현재의 보완 협약, 미흡한 2013년의 협약을 改惡하며 위기를 반복하는가?” 인천대학교 교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3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보완 협약」에 대해 그간 진행되어 온 전체교수회의, 단과대별 교수회의, 교수평의회를 통해 많은 교수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의 보완 협약은 재산협상에 대한 본질적이고 합의된 목표의 부재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직 지금 타결해야 한다는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 물론 재산협상의 목표는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리 대학의 재산을 되찾고, 통합과 법인화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인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지원을 완전하게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제시된 표 참조).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저버리고, 협상의 유연함, 시간의 제약성 등을 강조하는 것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2013년 협상의 실패로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행부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의 명운이 걸린” 협상이라면 더더욱 지금 타결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 협상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재의 보완 협약을 일괄로 타결하는 것에 많은 구성원이 우려를 표명하였기에 집행부는 우리 대학, 바로 인천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11공구 10만 평의 축소 조항, 제물포 부지 6만 7천 평의 연내 반환 조항 삭제, 축소된 3만 평에 대한 조성원가(평당 389만원, 총 약 1200억 원 상당) 매입 계획, 유수기능 해제의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유수지 확보 계획(토지 매입 계획) 등 한건 한건이 중차대하기에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및 재정여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로 가야만 한다는 우리 대학 본부의 주장이 과연 인천대를 위함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p>	<p>2019년 8월 전체교수회의</p>
2019	09. 06.	<p>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보완협약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p>	<p>- 인천대학교 법인 전환에 따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보완협약 사항에 대해 단과대 및 전체교수회의와 교수평의회 논의에 따라 본부의 답변 및 관련 자료를 19. 09. 16. 까지 강력히 요구.</p>	<p>전체교수회-102 (19.09.06.)</p>
	10. 08.	<p>인천대 지원에 관한 보완협약(안)에 대한 인천대 의견 제출</p>		
	11. 18.	<p>인천시와의 재산 보완협약(안)에 대한 우려사항과 문제점</p>	<p>- 발전기금 지급 관련 조항과 송도 11공구 10만 평 관련 조항에 대하여 2013년도 협약 안과 2019년도 보완협약(안)을 비교하여 전임교원들에게 의견을 보냄.</p>	<p>교수회장 전체 메일</p>
	12. 05.	<p>성명서 : 대학당국은</p>	<p>- "대학 당국은 반민주적인 재산협약을 즉각 중지하라!" 조동성 총장의 대학당국은 <인천대학교-인천광역시간 재산협상 보완협약(안)>이 대학평</p>	<p>성명서</p>

		반민주적인 재산협약을 즉각 중지하라	<p>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인천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를 유발하였다. 인천대학교 구성원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루어진 대학평의회 부결 결정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법인이사회에서 묵살한 이번 사태는 향후 존중과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대학 법인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지난 40여년 계속된 인천대학 민주화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인천대학교 교수회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일의 책임은 대학의 민의를 저버린 대학당국 및 법인이사회에 있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p> <p>대학당국은 대학평의회 부결 결정을 묵살한 채 강행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간 재산협상 보완협약을 즉각 원천 무효화하라</p> <p>기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보다는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수정안만을 거듭 강요하는 인천시는 인천지역 유일한 국립대학의 터전을 말살하는 안하무인식 갑질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p> <p>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인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일방적 재산 축소 강요에 본분을 망각하고 무기력하게 편승해버린 법인이사회는 각성하라</p> <p>재산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수방관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조동성 총장은 임기 말 굴욕적인 보완협약서 서명을 즉각 포기하고 대학구성원 앞에 사과하라</p> <p>대학평의회 결정을 묵살한 채 대학당국과 인천시의 반민주적 전횡에 앞장선 대외협력부총장과 대외전략처장은 대학의 민의를 저버리고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라</p>	
2020	01. 28.	제1차 교수평의회	<p>- 인천시청 기자회견 관련 성명서 발표 논의</p> <p>첫째, 이 보완협약은 인천시 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약안이 아니다.</p> <p>둘째, 이 보완협약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인천대학교 구성원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정당한 협약안이 아니다.</p> <p>셋째, 이 보완협약은 지역대학을 역차별하는 심히 불공정한 협약안이다.</p> <p>넷째, 인천광역시 의회에 호소한다.</p>	
	01. 29.	인천대-인천시 간 재산보완협약 반대 기자회견	<p>- 언론 보도자료 [인천대 교수들 “인천시-인천대 재산협약 수정 중단하라”]</p> <p>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 발표. 인천시가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에 제공하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땅을 대폭 축소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 교수들이 반발함.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반민주적인 협약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p>	
2021	01.28.	제 28회 교수평의회	<p>- 인천시청 기자회견 (01. 29.)관련 성명서 발표 논의 (재산보완협약에 대한 반대)</p> <p>보완협약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인천대 구성원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공정한 협약이 아니다.</p> <p>보완협약은 인천대를 위한 인천대발전을 위한 협약안이 결코 아니다.</p> <p>인천시 의회에 호소한다.</p> <p>(호소문 전문 뒷면 별첨)</p>	회의록

2021	10. 14.	제물포 캠퍼스 무상양여 계약 및 개발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물포 캠퍼스 관련 20. 06. 25. 체결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의 ‘공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의 심각한 문제점 지적 - 계약 이전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함 -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임 	이메일 문건
------	---------	---	--	--------

4. 교수회 설립

가. 교수회 학칙화 과정

- 일찍부터 교수협의회 개헌에 대한 논의 시작
- 2004년부터 교수회 학칙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및 본부예의 요구 시작
- 2008년에는 교수회를 집행부와 구분, 교수평의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
- 2016년 7월 이사회 통과

1997	04. 30.	교협 개편에 관해	-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하였던바 현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개편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97. 05. 01. 부터 교협 내 '교협 개편에 관한 연구분과위원회(가칭)' 설치 및 위원 위촉 윤용만(경상대학), 분과위원장 이원준(경상대학) 황상순(공과대학) 성장훈(예체능대학)	인교협 97-6
2004	04.	교수회 학칙화에 관한 국교협 조사	- 교수회 학칙화에 관한 국교협 설문 진행 - 04. 20. 국교협 회원교 학칙조항 및 학칙화 진행 현황 조사 > 경상대학교 학칙 중 교수회와 대학평의회 관련 조항 > 충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충주대 학칙 중 교수회 관련 조항 >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운영규정 > 충북대학교 교수회 > 진주산업대학교 전체교수회규정개정(안)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 순천대학교 학칙 중 개정학칙 > 공주대학교교수회 학칙화 규정 > 서울산업대 교수회 학칙화 규정 > 강원대학교 평의회 학칙화 규정 > 창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04. 29.	교수회 학칙화에 관한 국교협 설문 회신결과	1. 강릉대학교 교수회 - 본교의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되어 있다 (X) - 금년도 내 추진 계획 (O) 진행과정: 학교당국에서 교수회에서 보낸 학칙화 관련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와 인사위원회의 위상 문제 > 교수회와 대학 당국의 교무위원회의 예산 등에 관한 위상 문제 > 교수회장단의 예우문제 2. 강원대학교 평의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평의원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O) - 학칙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되었는가? (89. 03. 14.) 3. 경북대학교 교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교수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O) - 학칙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되었는가? (99. 11. 26.) - 학칙화 진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협회의 노력과 당시 총장의 공약사항 > 교육부와의 쟁점 있었음. 심의/의결기구가 되는데 있어 불명확하게 정의됨 4. 경상대학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O) - 학칙화 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되었는가? (03. 09. 24.) 5. 공주대학교 교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 되어있다 (O) - 학칙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되었는가? (03. 03.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수회 최종심의기구화 총회 통과하고 현재 학칙 개정 작업 준비 중 6.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03. 11. 05. 학칙 기구로 됨 7.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 진행: × (자료 조사 계획 중) 8.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가 되어 있지 않고, 금년도 내 학칙화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9. 목포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 학칙화되어 있음 학칙화되어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100%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보 	
--	--	---	--

			<p>완이 추진되어야 한다.</p> <p>10.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 본교는 교수평의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O) - 학칙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되었는가? (1996. 04.) - 우리 대학 학칙의 해당 조항 학칙 제59조(대학평의회) ①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을 둔다. ② 평의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1. 밀양대학교 - 본교는 교수평의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O) - 학칙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되었는가? (2002. 04.) - 학칙화 진행과정 > 임의기구였던 교수협의회를 교수들의 노력으로 학칙기구화 함 > 문제점: 학칙화는 되었지만 교수회 규정이 대학 내 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교수회 규정통과를 위하여 노력 중임.</p> <p>12. 부경대학교 - 교수회 학칙화 잘 되어 있음.</p> <p>13. 부산대학교 - X, 본부와 협상 중</p> <p>14. 삼척대학교 - 본교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X) - 학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년도내 학칙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X) > 학칙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대학에서 교수(협의)회의 역할 및 참여수준에 대한 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성회 예산 심의 / 주요 보직교수인사 동의권 등</p> <p>15. 상주대학교 - 본교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X) - 학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년도내 학칙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O) > 현재 학칙 및 교수회 규정 재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학칙화 진행과정 > 교수회 학칙기구화가 진행 중 > 교수회 학칙기구화에 대해 전체 교수회의에서 동의가 있었으며, 교수회 규정재정</p>	
--	--	--	---	--

			<p>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회 규정에 대한 초안이 작성 > 교수회 발족을 위한 교수회 추진위원회가 구성 > 현재 학칙 및 규정재정에 대해 추진 중에 있어 2004년 말까지는 교수회 학칙기구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p> <p>16. 서울교육대학교 - 학칙화 회신내용 없음</p> <p>17. 서울산업대학교 교수협의회 - 본교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되어 있지 않음 - 학칙화 추진 계획이 있음</p> <p>18.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 - 학칙기구화 추진 중 - 자치단체장(서울시장)과의 권장분장문제 등 국립대보다 난점이 많아 연구하고 있음</p> <p>19. 순천대학교 전체교수회 - 본교는 전체교수회 학칙화되어 있음 - 03. 05. 23. - 개정 규정 첨부 참조</p> <p>20. 안동대학교 교수회 - 본교는 교수회운영위원회 (교수회 평의원회)가 학칙화 되어있음 - 1990. 05. 안동대학교 "교수회운영위원회" - 현재 명칭변경 "교수회 평의원회"(04. 03. 10. 전교 교수회의 통과) > 04. 04. 10. 현재 학칙 미공포 - 공포되는 대로 명칭변경 > 따라서 현재의 명칭은 교수회 운영위원회</p> <p>21. 여수대학교 - 학칙화 03. 03. 01 - 종합대학 된 이후 1년간 진행 - 04. 04. 02. 총장선거와(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음) 맞물려서 진행 - 학칙 조항은 첨부해서 보내겠음</p> <p>22.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 학칙화가 되어 있고 1998. 02.에 되었음</p> <p>23. 전북대학교 교수회</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되어 있음 - 02. 02. 27. 전북대학교 학칙 제87조 3항에 "교수회 및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규정 공포되었음 - 현 교수회집행부는 2003. 03.에 시작하여 12월에 "교수회와 평의회 운영 세칙안"을 합의 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규정심의 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사료됨 <p>24. 진주산업대학교 교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되어 있지 않음 - 2004. 01.에 교무처에 교수회 규정개정 심의 및 공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중에 있음. <p>25. 창원대학교 교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 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학칙화를 추진 중에 있음 - 현재는 교수회가 의결기구(학칙기구는 아님)로 되어 있으며, 대의기구로 대의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회는 총장 및 교수회 의장 선출, 학칙 및 교수회 규정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체교수회를 대신하고 있음 - 앞으로 대학의 각 구성원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에 대비하여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를 서두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의 형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며, 의결기구에서 의결에 준하는 심의기구로 용어를 바꿀 계획 > 현재는 대의원회 내의 학칙분과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4년도 1학기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 > 현행 교수회 규정 참조 <p>26. 충북대학교 교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03. 11. 10. 공포(규칙 제633호)] 되어있으나 시행세칙의 제정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교수회의 학칙기구화 문제는 아직 완결되지 못한 상황 <p>27. 충주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화 되어있음. 03. 11. 04. <p>28. 한경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학칙화 X, 추진 예정 <p>29.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교수회가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첨부 <p>30.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교수회(평의회)가 학칙화 되어 있다 (X) - 학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년도 내 학칙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O) - 학칙화를 진행 중에 있고 학칙화에 대해 이번학기에 학교 측과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 현 총장이 금년 3월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수협의회를 학칙기구화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번 학기 내에 학칙화에 대해 학교 측과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 	
2004	10. 27.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교협 학칙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 09. 13. > 교무/기획/학생처장과 교협면담 > 빠른 시간 내 실무 논의팀 간의 자리 마련하여 의견 조율토록 논의함 > 하지만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현안 등을 이유로 지연됨, 강력 항의함 >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실무팀 구성 후 학교 측에 빠른 시행 촉구 	
2005	07.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 재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에 대한 요청(공문 발송 및 집행부 면담) 	
2005	07. 25.	학칙화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협의회에서 발송한 공문과 관련해 반응이 전혀 없음. 이에 교수협의회에서는 학칙화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집행부와 교수협의회 간의 실무팀 구성과 자리 마련을 제안 	공문
2006	02. 20.	학칙화 관련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 관한 질의 (대학본부의 입장과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설명, 구체적인 입장 계획 요청) 	
2008	05. 16.	대학집행부에 교수협의회 학칙 기구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과 교수회장의 분리 - 교수회의 실질적 심의 기구화 	공문 : 상동, 16쪽
2008	12. 18.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 요구 및 교수평의회 구성 개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와 집행부를 분리하여 운영 -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학칙기구화 할 것 - 교수평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 	공문 : 상동, 34쪽
2010	11. 17.	교수협의회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측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청 	공문 : 상동, 10쪽

2013	09. 04.	학칙기구로서 교수회 설립 요청	- 전체교수 대상 교협의 학칙기구화에 대한 의견 조사에게 재적과반수가 동의하였음 - 따라서 이에 필요한 학칙의 개정 및 관련규정의 제정을 요청함	공문, 교수협의회 학칙 개정(안) 및 관련 규정(안) : 상동, 15쪽 이하
2013	11. 07.	교수회 설립 및 평의회 구성과 관련된 집행부의 문제점 지적	- 교협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 - 이에 대한 교협은 집행부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함 -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초하여 평의회가 구성되어야 함	공문 : 상동, 19쪽
2015	04. 28.	제16차 운영위원회	- 6) 교수회 학칙화 <p.13 참조> -학칙 개정 논의 중- 평의회 보류 중	정기총회자료집
2015	09. 24.	교수회 학칙기구화를 위한 학칙 및 관련규정 개정 협조 요청	- 총장의 제안과 같이 교수회 학칙기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건을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첨부 자료와 같이 제출하오니 규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칙기구화 된 교수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인교협 15-08
2015	10. 12.	교수회 학칙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 교수회 학칙화를 위한 성명서 > 학생은 총학생회, 직원은 직원노조. 교수는 비 법적 교수협의회 > 현재 일방적 추진 중인 보수 현실화는 학칙화된 교수회 필요성을 보여줌 > 미래 외부 총장 및 이사장 체제하의 교권 보호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함	교협
2016 비대위 김은영	07. 19.	교수회 학칙기구화를 위한 학칙 및 관련 규정 이사회 통과	교수협의회가 학칙기구인 교수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음	

나. 교수협의회 해산 및 교수회 출범

2016 21대 김용민	08. 25.	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총회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신임 교수협의회장 선출: 김용민 교수	
--------------------	---------	------------------	------------------------------------	--

09. 02.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선출 요청	빠른 시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에 협조를 당부	공문 :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16. 12. 05.), 5쪽
09. 21.	교협의 교수회 규정(안) 송부 및 교수회 규정 제정 요청	전체교수회와 관련된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교수회를 출범시켜야 함 집행부는 규정 제정 절차를 서둘러 착수해 주길 촉구함 교협이 마련한 규정(안) 첨부	공문 및 교협의 교수회 규정(안) : 상동 6쪽
10. 11.	새로 출범한 교수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교수협의회 해산 및 교수회 구성을 위한 교수임시총회 개최 논의	상동 2쪽
10. 31.	교육연구위원회의 교수회 규정 심의 결과 요청	교육연구위원회(10. 26.)에서 전체교수회 규정(안)을 부결 부결 사유와 회의록을 요청	공문 : 상동 8쪽
11. 29.	제3차 운영위원회	보고 사항 : 교수협의회장이 평의회 의장에 선출됨 교협 임시총회 및 교수회 총회 소집에 대한 논의 임시총회 부의 안건 및 준비 사항 검토	상동 4쪽
12. 05.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활동 및 재정 보고 교수협의회 존치 여부 논의에 관한 건 : 교협 사업 및 자산 처리 및 회계 잔액 처리 문 제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16. 12. 05.)
12. 20.	제4차 운영위원회	교수협의회 해산 관련 논의 교수회 출범에 따른 교수평의회 구성에 관한 논의	[인천대학교 교수회 임시총회 및 교수협의회 총회 회의자료] (17. 02. 23.),12쪽
2017 02. 23.	교수회 임시총회 및 교수협의회 총회	교수회 회칙(안) 상정 교수회 회비 납부에 관한 논의 교수협의회 활동 및 재정 보고 교수협의회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 : 교수협의회 해산 의결	[인천대학교 교수회 임시총회 및 교수협의회 총회 회의자료] (17. 02. 23.) 및 교수회 회칙(안)

	03. 10.	교수협의회 해산 통지 및 회비 입금 계좌 변경	2017년 2월 23일 개최된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수협의회 해산이 의결 회비 입금 계좌 공지	공문 : 상동 16쪽
--	---------	---------------------------------	---	-------------

다. 교수회 운영 -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1) 온라인 선거 등을 포함한 교수회 규정 개정

2017	04. 06.	인천대학교 전체교수회 규정 개정	16. 12. 05. 제정한 '교수회 규정'을 개정함	
2018	11. 28.	교수회 전담 직원 배정 요청	관련 현안 사항이 많아 현재의 교육 조교 1인이 감당하기 어려움 조속히 전담 직원의 배치를 요망함	공문 : 상동 24쪽
2020	10. 07.	전체교수회 규정개정(안) 가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선거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인천대학교 전체교수회 규정』 제3조(임원의 선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수평의회에서 선출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신설> -투표결과 -찬성: 263명(89.8%), 반대: 30명(10.2%), 참여인원: 293명(63.6%), 대상인원: 461명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9140

2) 교수회 소통 채널 마련

2014	04. 28.	제5차 운영위원회	- 7) 교협 네이버 블로그 개설과 교내망에 홈페이지 개설	정기총회자료집
2014	05. 02.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개설협조 요청	-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개설 요청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 바람	인교협 14-10

2019	06. 13.	제7차 교수평의회	<p>4) 교수회 홈페이지 새 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활동, 언론보도, 교수동정 등 - 자유게시판 참여(적극적 의견개진) 독려 <p>5) 신입교수들과의 대화모임 계획</p>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48
2020	11. 18.	교수회 운영위원(가칭)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채널 방법 협의(SNS 활용, 웹진, 교수회 홈페이지 등) 	회의록
2024	03. 07.	3차 운영위원회	<p>2. 연구소지원비 관련 카드뉴스 제작 예정</p> <p>3. 라운지 이용 권한 확대</p> <p>4. 교수회 건의사항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센터 대학구성원 자유요금 인상 - 편입생 수강신청 순위 조정 - 폐강 기준(입학 정원 기준) - SW 필수 교양 학점 조정 관련 	
2023	03. 23.	전체교수회 운영위원회	교수회 사무실 리모델링(견적 확인, 4월 중 진행) 외 6건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9148
2023	05. 24.	전체교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계획	교원 회의 및 휴게 공간 마련 위한 전체교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2023	07. 05.	전체교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계획	<p>전체교수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집기류의 노후화로 활용도 떨어짐</p> <p>교수회 사무실 리모델링 방안</p> <p>사무실 내외부 벽면을 유리벽으로 교체(벽면 철거 및 재시공, 바닥 공사 등)</p> <p>회의 및 휴게 공간을 위한 테이블 및 소파 배치(기존 가구 활용 및 추가 구매)</p> <p>휴게 공간 활성화를 위한 그 외 집기류 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철판, 아크릴 철판(회의 시 활용), 커피머신,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p>소요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금액 : 47,298,900원(금사천칠백이십구만팔천구백원) 범위 내 *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전기공사, 환경개선공사 - 가구 : 원형 소파 외 12건 - 집기류 : 전자철판 외 5건 	

2023	05. 04.	5차 운영위원회	<p>3. 교수라운지 구축 공문 발송</p> <p>4. 교수평의회 단체 카톡방 개설</p> <p>5. 교수회. 건의 진행사항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카드뉴스 공유</p>	
2023	11. 16.	18차 운영위원회	<p>2. 교수회 건의사항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소급 지침 개정의 건: 진행(총무과) - 업적평가 봉사영역 상시 입력의 건: 진행(교무과) - 추가된 건의사항 정리 	
	12. 07.	19차 운영위원회	<p>2. 카드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공무상 출장 시 여비 지급 관련 - 게스트하우스 예약 시스템 관련 <p>3. 교수회 건의사항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강좌 개설 비율 조정 관련: 진행(교육혁신원) - 영어강의 추가강의료 지급 기준 관련: 보류(추후 논의) - 인천대 석사 졸업 외국인 학생 박사과정 진학 시 서류제출 요건 관련: 진행 	
2024	03. 07.	3차 운영위원회	<p>2. 연구소지원비 관련 카드뉴스 제작 예정</p> <p>3. 라운지 이용 권한 확대</p> <p>4. 교수회 건의사항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센터 대학구성원 자유요금 인상 - 편입생 수강신청 순위 조정 - 폐강 기준(입학 정원 기준) - SW 필수 교양 학점 조정 관련 	
2024	04. 18.	7차 운영위원회	<p>1. 카카오휴리 카드뉴스 업로드 예정</p> <p>2. 교수님들 도서 헌납 관련 논의</p> <p>3. 라운지 보안카드 권한 변경 신청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교수님들 대상으로 네이버 폼, 메일을 통한 수요조사 예정 <p>4. 인천대학교 교수회 백서 개발 기본 계획안 마련</p> <p>5. 대학원 입학정원 변경 사태</p>	

- 신입교수 간담회 및 명함증정, 퇴임교수 선물 등

5. 교내 현안 활동

가. 총장선거 관련

1) 1996년

1996	03. 26.	성명서 발표	- 총장 사퇴 의사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일정 공표 촉구 96. 03. 15. :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이 사퇴 의향 발표 96. 03. 20. : 교무회의에서 96년 2학기 새로운 총장 체제 출범 천명	교수협의회보 제4호 (97.02.28.) : 7쪽
	03. 28.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인천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송부함	인교협 96-7
	04. 08.	교협 운영위원회	- 총장 선출 규정안 축소심의	
	04. 16.	교협 2차 임시총회	-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교협 안) 개정 논의	
	04. 25.	교협 3차 임시총회	-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교협 안) 개정, - 04. 29.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안 송부	인교협 96-17
			- 05. 01. 의결사항 통보 1) 회비 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가결(5월부터) 2) 총장 후보 추천 규정 개정 3) 향후 후보 선출 일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4) 교협 내에 가칭 공정선거 관리위원회 설치안	인교협 96-19
	05. 07.	전체 교수회의 소집 요청	- 교무처에서 마련한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안)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05. 13. ~05. 17.) 전체교수회의 소집할 것 요청	인교협 96-23
	05. 28.	전체교수회의 소집 요청	- 총장후보 선출규정 확정, 학교발전 및 기타사항을 다루기 위해 96년 6월 4일(화) 16:00시 경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 - 96. 05. 28. 교무회의 자료 가운데,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교무처장을 방문하여 사과와 해명 받음을 알림.	인교협 96-27 인교협 96-28
	06. 05.	성명서	- 전체 교수회의 소집 촉구 (교원 117명 서명)	교수협의회보 제4호 : 8쪽
	06. 19.	전체 교수회의	-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102 : 1 로 가결	교수협의회보 제4호 : 4쪽
	06. 28.	총장 후보 추천 규정	-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총장 후보 선출 규정안이 우리 대학의 규정으로 확정	인교협 96-36

08. 06.	총장후보 선출 준비	- 총장 후보 선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협의회 내에 공정선거 관리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의결 각 대학장은 소속 교수 가운데 1인을 (공과대학은 2인) 공정선거 관리위원회로 추천 -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 확정, 공개 바람	인교협 96-37 인교협 96-38
09. 02.	총장 후보 공정성 관리	- 공정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황미옥(일어일문학과), 노현철(수학과), 최병길(토목공학과), 오원선(경영학과), 한상철(경기지도학과)	
09. 09.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공정선거 관리기준	-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공정선거 관리 기준 공고 가. 신문, 방송, 각종 출판물, 유인물 등에 의하여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할 수 없음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향응제공, 집단적 시위, 모의투표와 기타 그에 준하는 행위 불가능 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벽보, 현수막, 확성기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에 관한 홍보 행위 금함.	인교협 96-40

2)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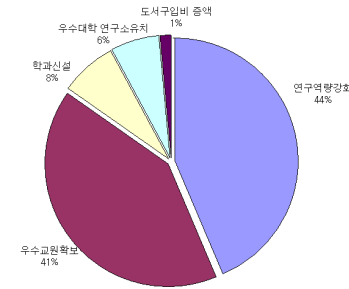
2004	05. 25.	2004년 교수협의 3차 운영위원회	- 2004년도 1학기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총장후보 초점토론회 개최 공문 발송 (교수협의회 회칙 제7조) - 교수협의회 총회 및 교협주관 후보자 정책토론회 안건 논의 > 제1부: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 신입교협의 사업계획 공지 - 이전문제, 교권문제, 학교발전대책(소위원회 소개) - 직원, 학생 총장선거참정권 문제 - 기타 > 제 2부: 총장후보 초청토론회	
	05. 27.	총장후보 초청 토론회	- 교수협의회 주최 총장후보 초청 토론회(교협회장 사회로 진행)	
	05. 31.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질문	1. 토의 안건 1) 연간 사업계획 2) 총장후보 선출 참정권 요구에 대한 경과보고 2. 총장선거 토론회 질문 1) 캠퍼스 이전 문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송도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과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여 총장이 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이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p>2) 재정확보 및 사용 계획 총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fund raising 방법 제시 바람 또한 국책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도가 높는데 효과적인 재정 사용 계획 제시 바람</p> <p>3) 교권 및 처우문제 연구년제 교원에 대한 지원, 교수계약제 도입, 승진 및 정년제도, 정교수 비율의 다 채워지는 현상 등 전반적인 교권 및 처우 개선 계획</p> <p>4) 대학발전 및 운영계획 구상중인 대학발전의 모델, 연구중심/교육중심(분리가 가능한 것인지), 학부제, 국립대 문제 등에 대한 생각과 실현가능성 제시</p> <p>5) 교수협의회 현안문제 교수협회의의 법제화, 학칙기구화를 총장이 되면 바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기 밝혀주길 바람</p> <p>6) 인천시와의 관계 인사권, 재정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실천 방법 제시</p> <p>7) 개인에게 질문: > 박호균 후보 명망에 대한 동경과 외부 인사가 가지는 한계점이 교차(4년 후 떠날 인사)하고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에의 애정에 대한 질문 석좌교수로 임명된 것이 총장후보가 되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 존재하는데, 만약 총장에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도 석좌교수로 남아 인천대학교 발전에 본인의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인지 질문</p> <p>> 허명재 후보 내부 인사에 의한 대학운영과 대학에 대한 애정, 그리고 10년이 된 시립화 주역의 한사람으로 내부 인사론의 기치로 내걸고 후보에 임함. 그에 따라 내부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과정에서 원활한 내부 후보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대후보는 사퇴하고 허명재 후보만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내부후보 단일화 과정과 그에 따른 전력의 약화에 대한 의견 질문 만약 총장이 된다면 상대후보를 포함한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치유할 계획 제시</p> <p>8) 두 후보 공통 질문 공약사항 정리 및 배포 여부 교협에서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후 공약사항을 포함한 전반적 임무 수행에 따른 중간평</p>	
--	--	--	---	--

			<p>가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수락 여부 질문</p> <p>9) 방청석 질문</p> <p>10) 마무리 발언</p>																											
	06. 04.	구성원 합의문 발표	<p>- 총장 선거 전체 구성원 참여를 위한 합의문 발표(구성원 대표 + 총장후보자)</p> <p>> 교협을 중심으로 한 교수 일동은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대학 운영의 중심주체로서 노력할 것</p> <p>>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요구한 참정권 요구는 당연한 구성원들의 권리이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절차와 어려움을 대학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며 차기 총장 선거에서부터 참여하기로 결단.</p> <p>> 총장 선거 후 당선자는 이번 결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학사 행정에 반영할 것</p>																											
2004	11.	<p>총장 공약사항의 우선순위에 관한 교협협의회 설문조사 결과</p>	<p>1. 총장공약 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분야</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응답 수(%)</th> </tr> </thead> <tbody> <tr> <td>대학발전분야</td> <td>37(47%)</td> </tr> <tr> <td>교수의 처우개선 분야</td> <td>20(26%)</td> </tr> <tr> <td>교수 및 연구 분야 관련 개선 분야</td> <td>14(18%)</td> </tr> <tr> <td>학생지원 분야</td> <td>6(8%)</td> </tr> <tr> <td>무응답</td> <td>1(1%)</td> </tr> </tbody> </table> <p>2. 교수처우 개선 분야 중 우선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응답 수(%)</th> </tr> </thead> <tbody> <tr> <td>학습여건개선</td> <td>21(27%)</td> </tr> <tr> <td>신분보장</td> <td>19(24%)</td> </tr> <tr> <td>복지시설개선</td> <td>17(22%)</td> </tr> <tr> <td>연구년</td> <td>11(14%)</td> </tr> <tr> <td>교권</td> <td>9(12%)</td> </tr> <tr> <td>무응답</td> <td>1(1%)</td> </tr> </tbody> </table>	항 목	응답 수(%)	대학발전분야	37(47%)	교수의 처우개선 분야	20(26%)	교수 및 연구 분야 관련 개선 분야	14(18%)	학생지원 분야	6(8%)	무응답	1(1%)	항 목	응답 수(%)	학습여건개선	21(27%)	신분보장	19(24%)	복지시설개선	17(22%)	연구년	11(14%)	교권	9(12%)	무응답	1(1%)	
항 목	응답 수(%)																													
대학발전분야	37(47%)																													
교수의 처우개선 분야	20(26%)																													
교수 및 연구 분야 관련 개선 분야	14(18%)																													
학생지원 분야	6(8%)																													
무응답	1(1%)																													
항 목	응답 수(%)																													
학습여건개선	21(27%)																													
신분보장	19(24%)																													
복지시설개선	17(22%)																													
연구년	11(14%)																													
교권	9(12%)																													
무응답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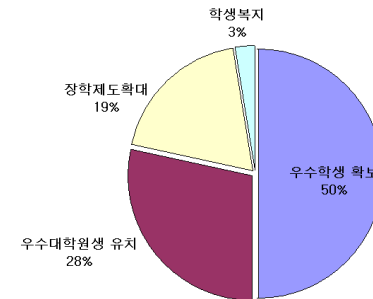
3. 교수 및 연구 분야 관련 우선순위

항목	응답 수(%)
연구역량강화	34(44%)
우수교원확보	32(41%)
학과신설	6(8%)
우수대학 연구소유치	5(6%)
도서구입비 증액	1(1%)
무응답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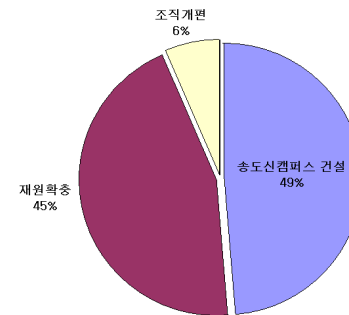
4. 학생지원 분야 우선순위

항목	응답 수(%)
우수학생 확보	39(50%)
우수대학원생 유치	22(28%)
장학제도확대	15(19%)
학생복지	2(3%)
무응답	0



5. 대학발전분야 우선순위

항목	응답 수(%)
송도 신캠퍼스 건설	38
재원확충	35
조직개편	5
무응답	0



3) 2006년 총장 중간평가 실시

2006	10. 08. ~10. 14.	총장 중간평가 실시	- 총장의 선거공약에 비추어 실제 정책과 행정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함	
------	---------------------	------------	---	--

4) 2008년 선거

2008	05. 26.	총장 임용 후보 입후보자 토론회 개최	- 시립인천대학교 제5대 총장 임용 후보 입후보자 3인을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관련 문건 : 상동, 18쪽
------	---------	----------------------------	---	--------------------

5) 2010년 총장중간평가

2010	05. 18.	총장 공약 중간평가 관련 집행부에 질의	- 총장 공약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 > 공약한 중간평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 결과를 대학 발전을 위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공문 : 상동, 8쪽
------	---------	--------------------------	--	-------------

6) 2012년 선거

2012	05. 09. ~15.	교협 주관 제 6대 총장 임용후보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협조 요청	- 촬영과 시설 지원 및 직원 참석 협조 요청 - 선거권이 있는 학생 직선대표 명단 요청	공문 5건 : 상동, 29쪽 이하
	05. 11.	인천대학교 제6대 총장임용후보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련 후보자 간담회	- 토론회 진행방법 설명 : 김용민 - 토론회 발표 등 순서 추천	상동, 4쪽
	05. 14.	제 6대 총장 임용후보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송도 캠퍼스)	- 장소 : 복지회관 소극장 - 전체 사회 : 김동원(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 - 토론 사회 : 유병국(부회장)	상동, 4쪽

05. 16.	제 6대 총장 임용후보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제물포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제물포 캠퍼스 본관 224호 - 전체 사회 : 이형우(총무) - 토론 사회 : 유병국(부회장) 	상동, 4쪽
---------	--	---	--------

7) 2014년 총장중간평가 및 총장선출규정 마련

2014	04. 28.	제5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총장 중간평가 방법과 설문 그리고 홍보 방안 - 중간발표 설문지 (설문지 업체에게 의뢰하였음) 	정기총회자료집																																				
2014	05. 26.	제6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총장 중간평가 방법과 참여 독려 방안 - 기간 연장, 미 참여자 독려 - 2) 중간평가 결과 조치 방안 	정기총회자료집																																				
	05. 20~ 06. 03.	총장 중간평가 교협 회원 조사 결과	<table border="1"> <tr> <td>1</td> <td>국가출연금 확보 공약</td> <td>못 지키고 있다: 93.0%</td> <td>잘 지키고 있다: 7.0%</td> </tr> <tr> <td>2</td> <td>한계에 도달한 학교재정 해결을 위해 총장직을 걸고 국비 확보해야 한다</td> <td>동의: 79.6%</td> <td>비동의: 20.4%</td> </tr> <tr> <td>3</td> <td>현 집행부 업무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td> <td>못하고 있다: 86.6%</td> <td>잘 지키고 있다: 13.4%</td> </tr> <tr> <td>4</td> <td>학교재산 관리 및 확보 공약</td> <td>못 지키고 있다: 88.5%</td> <td>잘 지키고 있다: 11.5%</td> </tr> <tr> <td>5</td> <td>민주적 대학운영 공약</td> <td>못 지키고 있다: 80.7%</td> <td>잘 지키고 있다: 19.3%</td> </tr> <tr> <td>6</td> <td>현 보직교수 구성에 대한 공약</td> <td>못 지키고 있다: 86.2%</td> <td>잘 지키고 있다: 13.4%</td> </tr> <tr> <td>7</td> <td>급여 및 연구비 인상 공약</td> <td>못 지키고 있다: 86.6%</td> <td>잘 지키고 있다: 10.8%</td> </tr> <tr> <td>8</td> <td>책임행정 구현 및 전박적인 총장의 업 무수행력에 대한 평가</td> <td>못하고 있다: 89.2%</td> <td>잘하고 있다: 10.8%</td> </tr> <tr> <td>9</td> <td>총장 및 현 집행부의 대학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td> <td>없다: 84.4%</td> <td>있다: 15.6%</td> </tr> </table>	1	국가출연금 확보 공약	못 지키고 있다: 93.0%	잘 지키고 있다: 7.0%	2	한계에 도달한 학교재정 해결을 위해 총장직을 걸고 국비 확보해야 한다	동의: 79.6%	비동의: 20.4%	3	현 집행부 업무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못하고 있다: 86.6%	잘 지키고 있다: 13.4%	4	학교재산 관리 및 확보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8.5%	잘 지키고 있다: 11.5%	5	민주적 대학운영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0.7%	잘 지키고 있다: 19.3%	6	현 보직교수 구성에 대한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6.2%	잘 지키고 있다: 13.4%	7	급여 및 연구비 인상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6.6%	잘 지키고 있다: 10.8%	8	책임행정 구현 및 전박적인 총장의 업 무수행력에 대한 평가	못하고 있다: 89.2%	잘하고 있다: 10.8%	9	총장 및 현 집행부의 대학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	없다: 84.4%	있다: 15.6%	
1	국가출연금 확보 공약	못 지키고 있다: 93.0%	잘 지키고 있다: 7.0%																																					
2	한계에 도달한 학교재정 해결을 위해 총장직을 걸고 국비 확보해야 한다	동의: 79.6%	비동의: 20.4%																																					
3	현 집행부 업무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못하고 있다: 86.6%	잘 지키고 있다: 13.4%																																					
4	학교재산 관리 및 확보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8.5%	잘 지키고 있다: 11.5%																																					
5	민주적 대학운영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0.7%	잘 지키고 있다: 19.3%																																					
6	현 보직교수 구성에 대한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6.2%	잘 지키고 있다: 13.4%																																					
7	급여 및 연구비 인상 공약	못 지키고 있다: 86.6%	잘 지키고 있다: 10.8%																																					
8	책임행정 구현 및 전박적인 총장의 업 무수행력에 대한 평가	못하고 있다: 89.2%	잘하고 있다: 10.8%																																					
9	총장 및 현 집행부의 대학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	없다: 84.4%	있다: 15.6%																																					
	06. 23.	비상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과 집행부는 현재의 난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재정확보 문제 해결 (교수 95% 부정적 평가) - 보직교수 등 인적 쇄신 (교수 86% 부정적 평가) - 민주적 대학운영 (교수 80% 부정적 평가) - 교협의 학칙기구화 																																					

2014	10. 20.	총장 선출관련 의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선출 규정에 관한 TF팀을 구성하는 연구 진행 중 - 연구 TF팀은 내부 교수뿐만 아니라 학외 인사인 변호사도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진행 중 	인교협 14-15																																
	11. 25.	제12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총장 선출 규정 연구 : 문상일, 김영진 교수, 김성규 대표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말 국교련에서 관련 백서 발간 예정 > 3번 정도 개괄회의, 서울대 규정을 놓고 내용을 변경하고 있음, 서울대는 30명, 인천대는 15명 > 정관이 무성의하게 만들어짐, 인원수는 교수 전체인원으로 구성 > 법률과 정관은 개정이 필요함, 운영세칙의 문제가 크다, 예비후보자의 정책평가 > 중점은 서울대규정이 18조 최종 3인을 결정한다. 순위를 비공개하고 3인만 올린다. > 우리는 3인을 선정해서 올린다.(총장추천위원회) 총추위는 3명 개별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없다. 	정기총회자료집																																
2015	04. 28.	제16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총장 선출 규정문제 : <p.1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집행부는 아직 관련 규정조치 만들 생각 없음(레임덕 걱정인 듯) > 평의는 자체로 총장 선출 규정 연구위 구성 : 위원장(박종태 의장) > 이사회와 평의 총추위 구성 권한 막강 (이사회 : 1/3 총추위 구성 권한, 총장이 사실상 장악, 향후 장기적 학교 발전을 위해 재출마시 공정선거 차원의 제한 규정 필요) (평의 : 2/3의 총추위 구성 권한) > 평의 구성과 선출의 문제 > 현직 총장, 이사, 보직교수, 또는 평의원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기득권이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공정선거 차원에서 공직선거에서는 선거 수개월 전에 관련 공직의 사퇴규정 	정기총회자료집																																
	05. 21.	제17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선출 규정 제정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집행부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단 <table border="1" data-bbox="763 1077 1747 1332"> <thead> <tr> <th>연번</th> <th>성명</th> <th>직(위)급</th> <th>소속</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양운근</td> <td>교무처장</td> <td>전자공학과</td> </tr> <tr> <td>2</td> <td>박동삼</td> <td>기획예산처장</td> <td>기계시스템공학부</td> </tr> <tr> <td>3</td> <td>유혜배</td> <td>교수</td> <td>영어영문학과</td> </tr> <tr> <td>4</td> <td>서진완</td> <td>행정학과장</td> <td>행정학과</td> </tr> <tr> <td>5</td> <td>류인모</td> <td>법과대학장</td> <td>법학과</td> </tr> <tr> <td>6</td> <td>유병국</td> <td>무역학부장</td> <td>무역학부</td> </tr> <tr> <td>7</td> <td>배양섭</td> <td>생명과학기술대학장</td> <td>생명과학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는 자체로 총장 선출 규정 연구위 구성 : 위원장(박종태 의장) 	연번	성명	직(위)급	소속	1	양운근	교무처장	전자공학과	2	박동삼	기획예산처장	기계시스템공학부	3	유혜배	교수	영어영문학과	4	서진완	행정학과장	행정학과	5	류인모	법과대학장	법학과	6	유병국	무역학부장	무역학부	7	배양섭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생명과학부	정기총회자료집
연번	성명	직(위)급	소속																																	
1	양운근	교무처장	전자공학과																																	
2	박동삼	기획예산처장	기계시스템공학부																																	
3	유혜배	교수	영어영문학과																																	
4	서진완	행정학과장	행정학과																																	
5	류인모	법과대학장	법학과																																	
6	유병국	무역학부장	무역학부																																	
7	배양섭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생명과학부																																	

11. 24.	제22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관련 사항 : 11. 27. 이사회 개최 예정 > 총장 선출 규정 보류됨 - 정책평가단 50% 반영 비율, 무순위 추천, - 윤호 이사 : 5명 이사회 총추위 추천 요구, 정책평가단 동문회 참여 요구, 	정기총회자료집
---------	------------	--	---------

8) 2018년 중간평가

2018	04. 19.	총장 정책 평가 및 중간평가에 따른 자료 요청	총장 공약 이행 여부 및 이행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집행부에 요청	공문 : 상동 44쪽
2018	09. 04.	총장 중간평가 발표대회	<p>평가단 구성 및 활동 교수평의회에서 총장 중간평가 실시 의결 (02. 26.) 평가단 구성 (03. 21.) 온라인 설문조사 (06. 12. ~30.) 중간평가 자료집 배포 (08. 30.)</p> <p>주최: 인천대학교 교수회, 인천대학교 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주요 내용: 전반적 직무수행, 분야별 17개 세부정책, 공약이행도, 직무 수행능력 평가</p>	상동 12쪽
	09. 10.	총장 중간평가에 따른 교수회, 직원노조, 조교노조의 요구	<p>중간평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회신해줄 것을 요구</p> <p>심각한 소통 부재의 문제 현실과 괴리된 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재정 및 예산 관련 공약의 불이행과 인천대 재산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의 부족 부적절하거나 불공정한 인사</p>	공문 : 상동 26쪽
2019	01. 31.	제1차 교수평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제 7대 조동성 총장 중간평가 및 발표대회 * 총장 중간평가 평가단 구성 및 활동 : > 18. 02. 26. 제 2차 교수평의회에서 총장 중간평가 실시 의결 > 18. 03. 21. 총장 중간평가 평가단 구성 유병국(위원장, 무역), 채진석(위원, 컴퓨터), 이준한(위원, 정외), 이형우(위원, 역교), 이영애(위원, 소비자), 김남근(위원, 기계) > 18. 06. 12. ~30. 총장 중간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응답률 70.6%) 	회의록 : 상동 10쪽

			<p>> 18. 08. 30. 총장 중간평가 자료집 배포</p> <p>> 18. 09. 04. 총장 중간평가 발표대회</p> <p>> 주 최 : 인천대학교 교수회, 인천대학교 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p> <p>* 중간평가 주요 내용</p> <p>> 총장의 전반적 직무 수행에 대한 전임교원의 평가는 61.1점(100점 만점)임</p> <p>> 총장의 분야별 17개 세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6점(5점 만점)으로</p> <p>> 17개 세부 정책 만족도 모두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함</p> <p>> 총장 공약 이행도 평가는 7개 분야별 27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가</p> <p>> 평균 2.76점(5점 만점)으로 세부 항목들 모두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함</p> <p>> 총장의 직무 수행능력 평가는 6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가</p> <p>> 평균 2.87점(5점 만점)으로 세부 항목들 모두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함</p>	
--	--	--	--	--

9) 2020 총장선거

2019	09.04.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인천대학교 교수회 '대학제도 및 운영위원회'에서 '대학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향 연구'를 주제로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지침의 개정(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구성원들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전체교수회-99 (19.09.04.)
	09. 10.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공청회 실시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연구에 대한 안내 및 개정(안) 제시 취지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지침(안) 세부 내용 설명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지침(안)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09. 23.	인천대학교 총추위 규정 개정(안) 및 시행지침 제정(안) 제출에 따른 발의 요청	-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안) 및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시행지침」 제정(안)을 반영하여 조속히 발의할 것을 요청함	
2020	01. 21.	총추위 개정안 추진 결과 보고	- 다른 구성단체의 참여 비율 확대 주장에 따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개정안의 추진이 어려워짐. 총추위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이 무산됨	교수회장 전체 메일

2020	02. 18.	총장선거에 대한 교수회의 요구사항	<p>1) 총장후보 평가시 정책평가단과 총추위의 평가반영비율을 현행 40:60에서 100:0으로 조정하여 구성원 모두의 바람인 직선제의 성격을 강화시킨다.</p> <p>2) 정책평가단에 학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총장선거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p>	교수회장 전체 메일
	02.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선거에 대한 교수회의 요구사항	<p>현재 간선제 하의 우리 대학의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함</p> <p>선거관리기능과 정책평가기능의 완벽한 분리를 통해 총추위에 의한 의사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총장선거를 이룸으로써 직선제적 선거를 완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p> <p>정책 평가단 및 총추위의 총장예비후보자 선정 의사결정 반영비율 조정.</p> <p>구성원의 정책평가단 참여도 확대.</p>	공문
2020	03. 17.	제3차 교수평의회	<p>1) 총장 선거 관련 정책평가단 구성 비율 및 총추위와의 의사결정 반영비율 등에 관해 교수회장이 3월 총추위 3차 회의에 교수회의 의견을 피력하였음.</p> <p>2) 전체 전임교원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 및 총장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고, 설문조사지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하였음. 또한, 각 학과장 회의에서 투표 독려 요청을 하고, 기프티콘 증정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함.</p> <p>3) 설문조사 실시 이후 이를 토대로 교수회 입장 정리 및 후보자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p> <p>4) 기타 :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기준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제기 논의</p>	회의록,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59
	03. 19. ~29.	총장선거 관련 교원 대상 설문조사	<p>총장선거 관련 결정사항(총추위 의사결정반영비율, 정책평가단 구성, 전임교원의 투표반영 비율 등)과 차기 총장후보자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전임교원의 요구도를 조사함</p>	교수회장 전체 메일
	04. 02.	제4차 교수평의회	<p>1. 총장선거 관련 전임교원 의견 수렴 결과 공유</p> <p>1-1) 정책평가단: 총추위 의견반영비율에 대한 의견 : 100:0(59.3%)</p> <p>1-2) 정책평가단 내 전임교원 투표반영비율 : 81.47%(41.0%)</p> <p>1-3) 정책평가단 구성에 대한 전임교원 참여도 : 모두 (75.3%)</p> <p>2. 교수회 연구과제 연구팀 1팀 선정(총장선거 및 정책연구)</p> <p>3. 총장후보자대상토론회 개최(안) 통과</p> <p>- 공통질문, 개별질문 등 구성에 대한 논의</p>	회의록,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60

			<p>※ 총장후보자대상토론회 구성 및 질문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팀에 위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p> <p>4. 총장선거일정</p>	
04. 10.	교수회 주관 총장후보대상자 정책토론회(1차)		<p>대상 : 총장후보대상자 6인</p> <p>참석자 : 이찬근 후보, 이호철 후보</p> <p>1차 정책토론회의 법률적 적합성 검토 결과 : 이상 없음</p>	
04. 14.	제5차 교수평의회		<p>1) 교수회주관 정책토론회 관련 : 교수회 대응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진행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였음</p> <p>2) 구성단위(교수회) 참여비율 : 교수회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투표반영비율 76.9%(현행) ~ 81.47%(2019년 국공립대학평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음</p> <p>□ 총추위의 교수회 주관 정책토론회 실시 자체 조치에 따라 적법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수회는 이에 대한 반박 메일을 발송하기로 결정함(참석 16명 중 반대 없음 : 가결)</p> <p>□ 총추위 주관 구성원 투표반영비율 등에 대한 면담/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p> <p>- 정책평가단 및 총추위 의사결정반영비율과 교원 투표반영비율 조정 등에 대한 논의 (100:0 조정 및 교원투표반영비율 등을 낮추는 등에 대한 논의를 했고, 교수회는 교원투표반영비율을 마지노선 76.9%로 설정하기로 함)</p>	<p>회의록,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61</p>
04. 14.	총추위의 교수회 주관 정책토론회 자체 조치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p>- 04. 10. 개최된 교수회 주관 총장후보대상자 1차 정책토론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한 총추위의 결정에 대한 개탄 표출</p> <p>- 제3대 총장선거의 전체 진행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전체 구성원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이러한 불공정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p>	
04. 21.	제6차 교수평의회		<p>1) 04. 20. 총추위 회의(공식적 발표 아님)</p> <p>2) 교수회 대응방안 논의 → 의결사항 : 총추위의 결정(교수 참여비율 70, 나머지 구성단위 30) 전원 반대에 따른 재논의 요구, 총추위 회의 결과 속기록 공개 요구</p> <p>3) 교수회주관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p> <p>□ 04. 20. 총추위 회의 결과: 교수 참여비율 70, 비교수 참여비율 30/ 정책평가단 및 총추위 평가반영비율 : 75:25, 평가방식 (정책평가단:1인1표제, 총추위:1인평점제), 정책</p>	<p>회의록,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62</p>

			평가단 및 총추위 평가결과 동시 오픈 □ 교수회 대응방안: 70:30의 불인정, 재논의 요구, 속기록 공개(의결 : 참석자 전원찬성) □ 교수회 주관 2차 정책토론회 세부사항 등 안내: 진행방식, 질문 사항 등	
04. 23.	교수회 주관 총장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2차)		대상: 총장예비후보자 5인 교원복지, 연구지원, 교육·인재육성, 대학 운영(행정) 영역의 총 4개 세부 영역 등에 대해 후보자의 중점 공약을 대상으로 총장예비후보자 간 상호 토론	
06. 11.	제7차 교수평의회		1) 이영애 교수 명예훼손 건 2) 최종 총장후보자의 이사회 결정 3) 보고사항 - 평의회(교수회) 추천이사: 이사회 투표 참여 - 이사회 구성 9인(총장, 부총장, 내부교수, 동문회추천, 평의회 추천, 교육부, 기재부, 인천시, 이사장) - 투표 결과 : 5표(이찬근), 2표(최계운), 2표(박인호)	회의록,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63
06. 26.	현 대학사태에 대한 교수회 입장		-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과정을 대학구성원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함 - 법인체제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2016년 총장 선출과정을 규정한 총추위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현 대학집행부는 물론, 교수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전횡을 일삼은 총추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 후보자, 총추위, 이사회 등이 서로 법인체제의 맹점을 활용하며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총추위 관련 규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함을 제안.	
07. 28.	제8차 교수평의회		1. 교육부공문(07. 24.): 총장후보자 재추천 요청 2. 총장후보자 선정절차 (서울대사례) 교수, 직원, 학생 등 각 단체 의견 정취 및 총장 후보대상자 공모 및 초빙단계부터 시작 3. 총장추천관련 규정 개정여부 (서울대) 차기총장선출이후 진행 4. 총추위 요구사항 1) 총장후보검증시스템강화 2) 총장선임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3) 일부 총추위 위원들의 선거중립성 훼손 5. 고소고발 문제 (교수/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고소 진행, 찌라시에 근거한 총장협박 고발 건) 6. 교수회 입장	회의록,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64

	08. 03.	총추위에 대한 교수회의 요구사항	<p>총장추천위원회 전원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함</p> <p>총추위 일부 위원들은 특정후보의 지지를 위한 행태를 선거기간에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음.</p> <p>최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총추위 위원장은 연구윤리검증 보완 요청과 이사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총추위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함. 이에 상기 제기된 문제는 현 총추위의 부당한 결의 절차와 독단적 운영의 결과로 가처분 소송 등 분란의 단초가 되었다고 판단함.</p> <p>총추위는 연구 부정행위를 포함한 총장예비후보자들의 검증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한 후보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함</p>	공문
2020	08. 27.	총추위에 대한 교수회의 재요구	<p>1. 교수회는 지난 교수회 요구사항[전체교수회-83(20. 08. 03.)호]에 대한 총장추천위원회 조속한 답변 및 조치 결과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바임.</p> <p>2. 교수회는 교수평의회(08. 20.)에서 최제운 명예교수의 “총장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제시된 일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제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 결과, 현재 총장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주체로서 지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 번 현재 총장추천위원회 전원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p>	공문
	09. 11.	박찬대의원 대표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 송부	<p>- 박찬대의원 대표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을 송부</p>	전체교수회-99 (20.09.11.)
	09. 15.	교수회규정개정 및 국립대법개정	2) 교수비중이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이 또다시 국회에 발의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9139
	10. 06.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류」제·개정(안)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 제출	교무과-12084(2020.09.24.)호와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류」제·개정(안)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 제출.	전체교수회-122 (20.10.06.)

10) 2021년 총장 선거

2021	01.	교수회 주관 총장예비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 관한 안내	- 총장 - 일시(02. 01.) 및 장소 - 참석대상: 후보자 4명, 교수회장 및 운영위원 4명, 사회자 등 - 진행형식 - 사전 진행 사항 등	이메일 문건 2개
	02. 01.	2차 운영위원회	- 정책토론회 진행 (공통질문, 개별질문, 상호토론) - 정책토론회 뒷정리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02. 01.	교수회 주관 총장예비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참석자: 총장예비후보자 (박종태, 박인호, 임경환, 최계운) 및 교수회 운영진 진행형식: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하며 공통질문 2개와 개별질문 1개 및 상호 토론으로 구성 시청 방법: 교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사진 2매 : 상동 5쪽
	02. 02.	교수회 주관 총장예비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시청 안내	시청 내용 및 방법(교수회 공식 유튜브 링크) 토론회 순서	이메일 문건 : 상동 28쪽

11) 2023 중간 평가

2023	07. 20.	총장 중간평가 회의 결과 보고	중간평가 설문 문항 항목 구분 및 역할 분담	
	08. 03.	총장 중간평가 회의 결과 보고	설문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향성 논의	
	08. 07.	총장 중간평가 회의 결과 보고	중간평가 홍보 및 공유 방식 논의	

나. 학교 운영 관련 활동












1) 대학 편제 및 구조조정 관련

• 1997년 법과대학 독립 관련

1997	11. 12.	학교현안에 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예산 집행, - 대학 운영의 자율권 확보 방안, -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대학발전기획, - 교육부의 시행계획인 거점대학에 대한 학교 당국의 복안, - 법과대학의 독립 근거, 연구년제, - 부교수 정년 보장 등에 대한 질의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29쪽
1998	11. 09.	학교현안에 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대학의 독립 근거에 대하여 - 거점대학에 대한 학교당국의 복안에 대하여 -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 대학발전기획단에 대하여 - 연구년제에 대하여 - 부교수 정년보장에 대하여 	

• 2004-2005년 활동

2004	06. 07.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p>3.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협의 입장은 획일적 비율의 학생 수 감축에 대한 반대 입장과 현재의 의견 수렴 방법(학장회의)등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무처장과의 면담에서 교협회장이 전달 > 현재 학교의 입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 > 대응 방안 논의 	
2005	06. 17 ~27.	교수협의회 설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결과 <p>1. 현재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다음 중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p> <p>10% 학생 감축 63% </p> <p>대학특성화 35% </p> <p>No Answer 2% </p>	

			<p>2. 국립대 전환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32%  불필요 68%  No Answer 0%</p> <p>3. 현 집행부의 의견수렴 과정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 1% 보통 12%  부적절 85%  No Answer 0%</p> <p>4. 의견수렴의 절차로는 어떠한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교수회의 50%  단과대학회의 25%  특별위원회구성 22%  No Answer 2% </p> <p>5.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42%  불필요 55%  No Answer 2% </p>	
--	--	--	--	--

• 2011년 체육학부 정원 감축

2011	09. 15.	체육학부 정원 강제 조정에 관한 교협의 입장	- 비민주적, 독단적 행정 절차에 유감을 표함 - 해당 학부에 교육지원 등의 합당한 보상을 요구	공문 : 상동, 76쪽
------	---------	--------------------------------	--	--------------

• 2013-2014 구조조정, 편제개편, 특성화

2013	12. 06.	편제 개편과 관련된 교협의 의견	편제 개편의 당위성과 방향이 구성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 여론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과정과 시간이 부족했음	이메일 문건 : 상동, 21쪽
2014	04. 17.	졸속적인 구조조정	- 교수협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불통을 넘어 비민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집행부의 각성과 개혁 촉구함 - 졸속적인 이번 구조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설득력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요구	
	04. 17.	제4차 긴급운영위원회	- 기획처장과 대학구조조정 논의	
	04. 18.	의견 수렴 촉구	- 집행부의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설득력 있는 기초자료 제시 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할 것을 촉구	인교협 14-08
	04. 21.	의견 수렴을 위한 전체교수회의 개최 요구	- 학교 집행부는 즉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한 전체교수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	인교협 14-09
2014	05. 26.	제6차 운영위원회	3) 졸속 구조조정에 대한 총장 항의 방문 (04. 29.) - 김은영, 전영우, 이종길, 이미가엘, 김민철, 박재윤, 문상일	정기총회자료집
2014	07. 05.	특성화 비한	-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된 정원 감축은 안 된다 - 수도권대 최고 7% 학생 감축하여 시행하는 특성화사업 즉시 중단해야 - 속 빈 강정인 특성화 사업과 무책임한 집행부 - 학생이 있어야 학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특성화도 있다	
	07. 07.	특성화사업 중단요구	- 7%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시행하는 특성화 사업을 중단하길 바람	인교협 14-11
	07. 07.	7%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시행하는 특성화사업 중단요구	- 총장의 특성화 사업 반납 약속 이행 요청	성명서
2014	09. 30.	제10차 운영위원회	2) 단대 편제 개편과 정원 감축(구조조정)대책 : ㉔ 편제개편성명서 제출(회장단) ▪ 정보대 ⇒ 공대, 생명대 ⇒ 자연대, 경영+동북아+세무회계 사회대 ⇒ 인문대 (문사철학과 30명 신설 인문대 제시조건 총장수락) ▪ 자체 특성화 사업 문제 (감축지원 : 1000만원/명) : 151명('16)+37명('17) ▪ 불문2명(5.7%), 영문4명(7.3%), 중국4명(7%), 건환10명(7%), 패션2명(5%) 기계13명, 전기3명(5%), 산경4명(5.7%), 안전2명(5%), = 총 42명 신청 중	
	10. 28.	제11차 운영위원회	2) 단대 편제 개편과 정원 감축(구조조정)대책 : ▪ 경과보고: 전영우 ▪ 정보대 ⇒ 공대, 생명대 ⇒ 자연대, 경영 + 동북아 + 세무회계	정기총회자료집

			<p>사회대 ⇒ 인문대 (문사철학과 30명 신설 인문대 제시조건 총장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특성화 사업 문제 : 총 63명 신청 중 (2014. 10. 07. 기준) <p>7) 기타사항 : 국교련 소식 -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p>	
2014	10. 22.	대찬 편제 개편	<p>지금 진행되는 편제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요청함</p> <p>만약 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신뢰성 높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편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p>	인교협 14-16
	11. 25.	제12차 운영위원회	<p>1) 한국대학학회 전국 지역순회 연속 집담회(11. 14. 금, 인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구조조정 국면이 대학교육의 현장에 미치는 영향 - 회장, 부회장(전영우) 참석 : 인천대, 인하대, 가톨릭대, 항공대, 인하공전 <p>2) 사회대 교수와 학생 44일째 농성 중, 총학 - 총장, 부총장실과 일부 처장실 폐쇄</p> <p>3) 대학발전협의회 - 11. 21. (금), 11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제개편 관련, 총학 불참으로 무산됨 <p>4) 국교련 특별 회의 - 11. 28. 부산대: 회장 참석 대상</p> <p>2) 단대 편제 개편과 정원 감축(구조조정)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보고: 인문대, 경영대, 사회대 학생과 총장 회의 예정 ▪ 새로 고려중인 학교 안: 인문+사회+경영, 자연, 공대, 사회대, 글로벌대, 도시대 ▪ 교수 117명 서명 성명서 발표 ▪ 집행부 단대별 의견 수렴결과: 의견을 제시한 5개대 모두 개편 반대 ▪ 일부 단대 교수 사이에 학교가 반목 조성함 ▪ 교수지지로 당선된 총장이 철저히 교수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교수사회와 반목 중임. ⇒ 대책 필요 ▪ 자체 특성화 사업 문제 : 총 69명 신청 중 (10. 28. 기준), 전자 6명 추가 ▪ 일률 정원 감축 고려중 ⇒ 대책 필요 	정기총회자료집

2)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1999	11. 29.	강의 평가의 문제점	-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터넷 강의에 대한 문제점 지적	(7대)인교협 99-11.29
2010	07.	성명서 발표	- 일방적 대학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 발표 > 현행 강의평가 제도를 교권 탄압 수단이 아닌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하라 >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교수연구실 등의 보완장치를 철거하라 > 무분별한 민간위탁경영을 철회하라 >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총장중간평가를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 : 상동, 13쪽
2010	07. 22.	강의평가 공개 및 과정에 대한 질의	- 현행 강의평가 방식에 보완이 필요함 - 2009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규정의 소급 적용으로 문제가 있음 - 강의평가 공개 결정이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	공문 : 상동, 10쪽
2013	05. 10..	대학발전계획(안) 및 운영성과목표(안) 의견 수렴의 문제점과 설명회 개최 요청	졸속적 의견 수렴과 행정편의주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체교수회의나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공문 : 상동, 13쪽
2014	08. 22.	일련의 학교 주요 사건에 대한 조치 사항 문의	- 직원 수당 관련 10억 원 증액에 따른 총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함 - 21억이란 세금 추징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한 결과 요구 - 국가장학금 처리의 잘못 처리로 2억 원 범칙금을 대교협이 물어야 한다는 내용과 경과 조치 사항을 알려주길 바람	인교협 14-14
2015	01. 05.	제13차 긴급 운영위원회	2) 학교 도메인 변경 : 총장, 부총장실과 일부 처장실 폐쇄	정기총회자료집
	01. 05.	웹 메일 주소 변경 중지 요청	기존 도메인이 이해가 쉽고 지역의 상징성이 나타남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수반됨 일본어 표기로는 INU는 개(犬)을 의미하여 어감상 적절하지 않음 영문 표기에 맞지 않음	인교협 15-01
2017	07. 25.	매트릭스 연계전공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공문 전달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학칙까지 위반하며 진행되고 있다 국비확보란 명분은 원하는 대로 집행부가 특채를 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식의 특채를 위한 국비 확보라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공문 : 상동 31쪽 교무처장 회신 : 50쪽

	08. 02.	매트릭스 연계전공과 관련하여 교무처의 답변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을 메일로 발송	매트릭스 연계전공이 졸속적으로 설계되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 없음 현 매트릭스 연계전공은 명백한 학칙 위반임 정말 특채로 모시는 교수님들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이메일 문건 : 상동 61쪽
2019	06. 13.	제7차 교수평의회	1) 40주년 기념사업 건 - 비전선포, 열린 음악회 개최 등 시기부적절 및 비용과다 문제 대두 - 임기 말, 교육부 징계 등 학내외 사정에도 불구하고 강행우려 - 대학평의회(06. 20.)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 2) 2018년 학술 연구상 선정 오류 문제 - 관리소홀 및 시스템 오류로 이미 발표된 수상자가 뒤바뀌는 결과 초래 - 수상자 재선정에 따른 피해 및 늦장 대응의 문제 - 정확한 오류원인 규명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무분별, 무원칙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 심각 (연구상 선정, 장학금중복, 종합소득세 문제 등) - 대학평의회(06. 20.)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 3) 총장징계 및 대학 피해에 대한 사항 4) 교수회 홈페이지 새 단장 - 교수회활동, 언론보도, 교수동정 등 - 자유게시판 참여(적극적 의견개진) 독려 5) 신입교수들과의 대화모임 계획 6) 기타 안건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48
2019	02. 01.	강의개선 계획 기준 점수에 관한 이의제기와 조치 요구	강의개선계획 입력대상으로 변경 조정된 '전년도 강의평가 3.8점미만 교원'은 강의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없는 사항임 교원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공문 : 상동 16쪽
2020	12. 29.	트라이버시티 사업 운영계획 및 집행 내용 전달	교수회가 제기한 트라이버시티 연구소 설립의 문제점 교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학본부가 보낸 답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청	이메일 문건 : 상동 19쪽

2021	04. 27.	연구처의 대학평의원회 보고 내용 공유 : INU 연구클러스터 사업	21. 04. 27. INU 연구 클러스터 사업 인천대만의 연구 브랜드를 정립하기 위한 INU 연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투명성, 예산, 연구 성과, 사업수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메일 문건 : 상동 38쪽
2021	11. 09.	제2도서관 기부 모금 전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외부로부터 재원을 충당하지 않고 구성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모금 전략은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대학본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대외 전략을 세워 외부의 적극적 후원을 도모해야 함	이메일 문건, 주요 국립대학 기업 건물 기부 현황 목록
2021	11. 30.	승진제도 변경 안에 대한 교수회 회장단의 입장	교수회 회장단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삭제 등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교무처에 전달하 였음 개정안을 수정 없이 밀어붙이는 대학본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이메일 문건
2021	12. 01.	2021년도 제4회 교수평의회 개최를 공지	일시 : 21. 12. 02. (목) 17:00 안건 : 전임교원 승진 변경 안에 관한 긴급 대응 평의원이 아닌 교수님들께도 회의를 개방	이메일 문건
	12. 03.	승진규정 변경 안에 대한 교수평의회 내용 보고	12. 02. 교수평의회 결과, 12. 06. 성명서 발표를 만장일치로 결정 승진규정 변경안 전면 거부와 즉각 중단 요구 대학본부의 사과와 주무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임	이메일 문건
2022	04. 05.	(주) INU CORPORATION 관련 자료 제공 협조 요청	(주) INU CORPORATION 설립배경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사업 추가 사유 현 대표이사, 이사장,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절차 및 임기, 보수(수당) 지급 여부 등등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	공문 및 집행부의 회신
	04. 07.	자율혁신계획 특성화 선정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요청 항목 : 첨단 분야 특성화 분야 지원 학과(부) 리스트 및 연도별 예산 신청 금액 등 총 6개 항목	공문 및 집행부의 회신
2022	04. 25.	자율혁신계획 특성화 선정결과에 대한 교수평의회 의견	각 사업단 별 충실한 사업계획과 공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과 공개 절차로 연차 평가를 해야 함 집행부는 핵심 지표와 자율지표 수행 여부를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이메일 문건
2022	05. 02.	(주) INU CORPORATION	만성 적자 운영 및 조직 구성의 불투명성이 크게 우려됨	이메일 문건

		설립 운영에 대한 교수평의회 의견	의사결정 시스템의 다양성 부재(총장 1인 주주 체제), 수익 창출의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등 여러모로 개선 의지가 절실히 필요함	
2022	07. 13.	총장의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에게 보내는 글	출범한 지 1년이 된 현 집행부는 학칙의 무시, 졸속적 사업 추진, 원칙 없는 인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 문제점을 표어로 요약해 현수막을 게시함 : 편의주의 인사/행정, 표류하는 대학 미래. 원칙 없는 대학 운영, 후퇴하는 대학 발전 등	이메일 문건
2022	07. 18.	우리대학의 막대한 홍보비와 민망한 대학 평판도를 비교하는 글을 구성원에게 보냄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공립대학 신문광고료 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가장 많은 광고료를 지출했음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 평판도는 종합 36위로 하위권에 속함 집행부는 대학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이메일 문건 및 관련 기사
2022	08. 02.	송도 캠퍼스 제2부지(셀트리온 옆) 개발 규모 축소를 비판하는 문건을 발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2부지에 들어서는 복합연구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조동성 총장 집행부는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음 진행 상황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었던 현 집행부도 책임이 있으니 깊이 반성해야 함	이메일 문건
	08. 29.	08. 25. 전체교수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을 구성원에게 공지	IT 도서관 개관 지연, 부실공사 및 과다 건축비 문제 제물포 캠퍼스 개발계획 용역비 10억 원 추경 상정 INU 코퍼레이션 지배구조 및 이사진 임기 문제	이메일 문건
2023	04. 17.	전체교수회 3차 질의	<박사후연구원 해외연수 지원 사업> 관련 연구처 대안 마련 및 시행의 정확한 일정 안내 요함 학내 노조와 단체 협상 과정을 건체 교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일정 안내 요함 총장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들의 의견을 반영 가능한 방안 마련 촉구	공문
2023	05. 08.	전체교수회 4차 질의	학장 인선 과정에서 소속 전임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후 안내 요함 성과급 시행과 관련하여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 마련 요함	공문

2023	06. 27.	대학 연구 활동 지원 사업 확대 지원제도 후속 대책 마련 요구	대학 연구 활동 지원 사업 확대지원제도가 폐기된 이유와 과정 상세히 해명 요함 2021년 이후 과제 중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원되지 않은 모든 과제들에 대한 전수 조사 후 손실 복구 요함 대학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장기계획 수립, 상세한 설명 요함	
------	---------	------------------------------------	--	--

3) 예산 관련

2017	05. 22.	2018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된 교수회의 요구	집행부는 3,000억 규모의 예산계획서를 만들었지만, 기재부로 넘어간 예산은 980억이라고 함 이 액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공개해 주기 바람 총장은 모든 노력과 역량을 예산 확보에 쏟아야 할 것임	공문 : 상동 22쪽 집행부 회신 : 42쪽
2021	01. 28.	2021년도 예산 긴축안과 관련해 구성원에게 드리는 말씀	기획처는 세입예산액이 감소해 세부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 밝혔음 예산 수립 및 조정 작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듦 단과대학 및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음 교수평의회는 예산편성 절차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이메일 : 상동 30쪽

4) 인사 및 조직 관련

• 운영본부의 인사 문제

1989	03. 25.	총장의 권한 남용	- 총장 선거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보직 발령을 한 것과 관련 총장 권한 남용에 대한 시정 요구 - 외부 시간 강사의 채용과 관련 해당 학과장과 각 단과대학장에게 일임하는 관례와 달리 총장이 직접 일부 해당 학과의 학과장을 불러 채용 진행에 대한 답변 요구	인교협: 제32호
2015	02. 12.	총장 최측근 인사의 특별 채용 사태	이번 총장 최측근 인사의 특별채용 사태는 우리대학 교수사회의 자존에 관한 문제임을 유념하여 학교 당국은 철회해 줄 것 학교집행부의 설명대로 학교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교수자원이었다면, 총장 최측근이었던 당사자가 타교로 이적할 당시 만류하지 못한 무능력과 책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보여줄 뿐임 엄격한 선발기준과 승진요건으로 불철주야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많은 신입교수들과 구성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임	

• 부총장 관련

1991	01. 17.	제7차 운영위원회 개최	- 부총장 임명 문제 논의, 우리 대학의 학생 수 및 재정능력으로 보아 부총장 선출을 유보하자고 결의, - 부총장 신설 반대 성명서 발표	교수협의회보 제5호: 3쪽 교수협의회보 제5호: 6쪽
1999	09. 17.	부총장 인사 파동	- 송희연 학장의 부총장 임명 및 임면(4시간 간격의 인사위원회) 인사 파동에 대한 성명서	(7대)부총장인사파동_성명서
	10. 26.	부총장 인사 파동	- 송희연 학장의 부총장 인사 파동에 대한 교무처장, 학장 등 관련 인사에 대한 면담을 통한 진상 조사	(7대)부총장인사파동_관련인사면담
2015	09. 22.	제20차 운영위원회	# 대외 부총장 신설 (특정 인사를 위한 위인설관 및 총장 선거관련 논란 중)	정기총회자료집
	11. 24.	제22차 운영위원회	○ 대외 부총장제 신설 무산 - 평의원로 반대 무시하고 2차에 걸쳐 총장이 이사회에 직권 상정 - 10. 02. 이사회서 교육부와 인천시의 반대로 보류됨 - 11. 06. 이사회 직전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상정 철회	정기총회자료집
2018	12. 03.	대외협력부총장 특채 관련 보도에 대한 질의 및 요구	대외협력부총장 특별채용 관련 보도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공개할 것 학교 관련 보도의 선별적 제공을 중단할 것	공문 : 상동 23쪽

• 학장 선거

2014	09. 15.	학장직선제 추진 안내문	학장직선제 도입 관련하여 교수여론조사를 실시 교수님의 84%가 도입을 찬성	
2014	09. 30.	제10차 운영위원회	1) 학장직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인준 선거 개표 (09. 29.까지 160명 투표지 회수) ▪ 총 412명, 연구년과 휴직, 파견, 미해당 대학 제외 시 : 334명 ▪ 학장 포함 교무위원 제외 시 : 312명 ▪ 개표와 추후 대책 : 단대별 시행-단대 운영위원 중심으로 선거 실시	정기총회자료집
	10. 28.	제11차 운영위원회	▣ 회장인사 및 보고사항: 1) 학장직선제 인준 투표 결과 보고	정기총회자료집

			대학	투표자수	동의	반대	무효	동의율	비고	
			인문대학	13	10	2	1	77%		
			자연과학대학	29	20	9	0	69%		
			사회과학대학	24	17	6	1	71%		
			법과대학	4	3	1	0	75%		
			공과대학	55	42	13	0	76%		
			정보기술대학	24	12	12	0	50%		
			경영대학	7	4	3	0	57%		
			동북아경제통상대학	1	0	0	1	0%	투표 비 대상	
			예술체육대학	16	10	6	0	63%		
			사범대학	14	14	0	0	100%		
			도시과학대학	13	5	7	1	38%		
			생명과학기술대학	6	5	1	0	83%		
			총계	206						
11. 25.	제12차 운영위원회	1) 학장직선제 단대별 시행 세부 규정 - 김민철 교수								정기총회자료집

• 교수 임용

1991	02. 04.	신규 교수 채용 건의	- 교수 채용 학과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우선순의(교수확보율)에 의해 선정함 - 교수 채용의 절차와 과정은 해당 대학 및 학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완전 공개하며 엄정한 평가에 의해 시행 -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인교협 제91-9호
1991	02. 20.	신규 교수임용 과정 및 간담회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지켜 신규 교수 초빙학과를 결정하고자 한 약속 이행 촉구	교수협의회보 제5호: 5쪽
1991	06. 27.	시정 및 해명 요구	- 충원율이 높은 학과의 신규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교권 침해로 총장과 관련자들에게 시정과 해명을 요구	인교협: 제91-29호
1997	05. 20.	미임용 교수 문제	- 인천대학교 미임용 교수 문제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견해 발표 - 미임용 교수 문제에 관한 진정서 및 건의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22쪽, 24쪽, 27쪽
1999	09. 10.	교수 임용 문제에 관한 건	- 98년 2학기 국민윤리학과 교수 임용 문제에 관한 건	(7대)교수협의회보 제5호(99.09.14.) : 28쪽

2017	04. 21.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개정안과 ‘2017학년도 전임교원 특별채용 추진계획’에 대한 교수회의 요청	집행부는 특별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 함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공문 : 상동 20쪽
2017	06. 01.	전임교원 상시 특별채용 제도의 문제점과 교수회의 요구	관련학과 교수가 배제되어 있는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대학본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특별채용은 엄청난 부작용과 심각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공문 : 상동 23쪽
	07. 05.	초빙교원 특채와 관련한 교수회의 요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초빙교원 임용을 왜 특채로 진행하는가? 이번 특채되는 초빙교원의 처우가 기존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교수채용을 시도하고 있음	공문 : 상동 25쪽 교무처장 회신 : 44쪽 이하
	07. 06.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전면 영어강의 요구의 문제점	초빙공고의 자격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신규임용 교원 대상으로 영어 강의 미실시 사유 제출 요구는 부적절한 처사임 전공의 특수성이나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 수업을 강권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함	공문 : 상동 27쪽 교무처장 회신 : 46쪽
	07. 11.	초빙교원 비공개 채용과 관련한 교수회의 재요구	이번에 초빙하는 교수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 임용 기본계획 수립 관련 문건 등 해당 문건을 공개할 것 해당 초빙교원의 처우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줄 것	공문 : 상동 29쪽
	08. 21.	집행부의 무리한 특별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관련학과와 협의가 없고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융합과학기술원 소속 특별채용의 불확실성이 너무 큼	성명서 : 상동 40쪽
	08. 25.	인사위원회 개최 무산과 관련하여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	교수회의 거둬진 문제 제기에도 집행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채용 건을 통과시키려 함 총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무산된 것은 구성원의 뜻을 여실히 보여줌 교수회는 구성원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	관련 이메일 : 상동 64쪽 총장의 답신 : 65쪽

2019	02. 08.	교육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감사결과 통보에 관한 건	2018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최종 면접 전형과 관련하여 총장을 포함한 채용 심사위원회 위원 4인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음 구성원에게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처분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공문 : 상동 15쪽
2019	02. 22.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에 따른 교수회의 요구	교육부 채용비리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고 현재 수사 의뢰된 총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사퇴에 따른 대학행정의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메울 것	공문 : 상동 14쪽
	02. 26.	제2차 교수평의회	총장사퇴요구에 대한 상황설명 및 논의	교수회 홈페이지 글번호: 368943

• 교수 승진 관련

1989	11. 23.	총장과의 면담	- 총장과 교수협의회 회장단(장석우, 이승종, 강 광) 면담 진행 1) “학교발전과제” 정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2) 교수협의회 전임 조교 배치요청 3) 교수 승진 유보 사태에 대한 항의 4) 교수의 인사카드 중 “연구실적”을 학생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항의 5) 김선형 교수 복직 촉구	인교협: 제95호
	11. 23.	교수승진 지연 관련 항의	- 승진임용 제청에도 불구하고 임용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항의 - 임용 절차 지연에 대한 조치 촉구 및 이유 해명 요구	인교협: 제97호 인교협: 제98호
1990	12. 20.	간담회	- 인문대학, 자연대학, 사회대학 학장 후보 선거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른 대책 논의 - 교수 승진지연 문제에 대해 승진 결정, 봉급도 소급적용 해주기로 함 - 91년도 신규교수 임용에 대해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기	교수협의회회보 제5호: 3쪽

•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추천

2018	12. 31.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건	향후 구성되는 교원의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교수회에서 각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공문 : 상동 21쪽
------	---------	-----------------------	---	-------------

• 기타 - 김선형 교수 복직 관련

1989	05. 24.	제15차 운영위원회의	- 김선형 면직 교수(전 윤리과 부교수)의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문제	교수협의회보 제2호: 3쪽
1989	07. 24.	제17차 운영위원회의	- 직권 면직된 김선형 교수가 본 협의회에 [교수 직권면직 처분 심의요청] 제출 - 김선형 신청인의 증언과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원에 대한 회신] 및 첨부 문서 검토 및 심의	인교협: 제40호

• 석좌교수 임명추진 중단

2013	02. 13.	김선형 전 교수의 석좌교수 임명추진 중단 요구	‘초빙교원 규정’에 명시된 석좌교수의 조건을 존중할 것 지금까지의 편법적, 편의적 운영을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석좌교수제도를 안착시킬 것	공문 및 집행부 회신 : 상동, 59쪽
------	---------	---------------------------	--	-----------------------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 발령

2017	07. 25.	일방적인 교원 소속 변경 명령의 철회를 요구함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소속 교수 3인의 산학협력단 발령은 명백한 교권의 침해이자 인사권의 전횡임 교무처장 전결로 된 인사 발령 공문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공문 : 상동 33쪽, 교무처장 회신 : 48쪽
	08. 08.	교원 소속 변경 철회 요구와 관련한 교무처의 답변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문제의 핵심은 1) 전임교원을 비교육기관인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발령하여 교육권을 훼손하였다는 것과 2) 이런 결정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내렸다는 것임 기본적 교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이메일 문건 : 상동 62쪽

5) 이사회 관련 문제

2014	03. 26.	인천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요청	-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	인교협 14-07
2015	01. 12.	이사 후보 추천 재요청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많아 많은 구성원들이 우려를 표명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되는 중 금 번 선임될 이사는 향후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추천되어야 함	

			<p>결과적으로 부적격 후보가 추천되어 후보군이 과장되는 절차상 문제 발생</p> <p>헌법상 투표 방식의 기본원칙인 1인 1표 등가치원칙에 의해 추천위원들이 1인 1표로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p> <p>이번 이사선임을 보류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시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을 요청</p>	
	01. 27.	새 이사 후보 대상자 2인 선정	<p>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을 통한 새 이사 후보 대상자 2인 선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를 다시 선임해 주길 바람</p>	인교협 15-02
	01. 28.	신임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하여	<p>2인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부결 처리됨</p> <p>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이사 후보 대상자 2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를 선임해야 함</p>	
2015	03. 27.	이사회는 외부이사 선출을 중단하라	<p>이사회는 법이 보장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차단된 채 외부 이사 선출을 중단하라</p> <p>평의원회를 대표하는 신임 이사의 참여가 원천봉쇄 되어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사회의 외부 이사 선출 행위를 연기할 것을 요구</p> <p>이사장인 총장과 교육부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도외시 하지 말고, 신임 박종태 교수의 이사선임결의안을 속히 승인할 것을 강력 요구</p>	
	04. 22.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실 확인과 후속 법률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01. 19. 교육부의 3인의 이사에 대한 일괄승인요청을 요구한 사실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길 바람 -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나머지 이사들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경우 임기 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교육부는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장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 후속 법률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향후 임기 만료된 이사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행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 - 퇴임이사에 대한 임기자동연장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유권 해설 요청 	인교협 15-05
2015	05. 21.	제17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추천위에 교협 인사 참여 보장 	
	11. 24.	제22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후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추천하여 1차 논의 (11. 27.) > 2차로 후보 추천위 구성하여 차기(12월) 이사회의서 선출 예정 - 이사 후보 추천위 참여 요청 여부, <p.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2차례 공문 요청 무답변 	정기총회자료집

6) 평의원회

2005	09. 29.	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칙 및 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 요구	- 현재 평의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평의원회 관련 학칙과 운영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시행될 평의원의 교체를 통한 정상화를 기대	
2013	11. 07.	교수회 설립 및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된 집행부의 문제점 지적	교협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교협은 집행부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함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초하여 평의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공문 : 상동, 19쪽

7) 공간 및 시설

1989	03. 25.	대학 건설 문제 질의	-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대학 건설문제 질의 1) 제2공학관 건립일정(설계도 공개 및 변경) 2) 대학원관 준공일정 및 안전대책 3) 도서관 건립계획	인교협: 제31호
2013	06. 14.	제물포 캠퍼스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과 운영계획 설명 요청	열악한 제물포 캠퍼스의 교육 및 연구 여건 여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함 제물포 캠퍼스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설명해주어야 함	공문 : 상동, 14쪽
2019	12. 31.	가로등 설치 요청	1. 교수회에서는 지난 신입교원 간담회(19. 12. 16.)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2. 그중 9호관 주변이 어두워 교수님들의 귀갓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교수회에서는 9호관 주변 가로등 설치를 요청	전체교수회-150 (19. 12. 31.)
2020	02. 04.	교직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조성 요청	교수회에서는 교직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	전체교수회-8 (20. 02. 04.)
2019	04. 08.	교내 자전거 및 게시물 관련 요청	교내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지침 마련 요청 교내 게시물 관리 및 감독 요청	공문(2건) 및 집행부의 회신

8) 토론회 개최

2002	06. 03.	인천광역시장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 '시립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인천광역시장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일시: 02. 06. 03. (월) 14:00 ~ 16:00 장소: 인천대학교 본관 7층 합동세미나실 주최: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사회: 이찬근 교수 초청토론자: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새천년민주당 박상은 후보, 녹색평화당 신맹순 후보, 민주노동당 김창한 후보, 사회당 김영규 후보 지정토론자: 권명희, 김선형, 홍재욱 교수	현수막, 포스터
2018	05. 29.	국립대학법인 전환 5년,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원 토론회 개최	발표 및 토론: 교수회를 포함한 인천대 모든 구성원 단체, 시민사회, 정당 기초발제: '지역사회와 인천대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교수회 회장), '법인전환 이후 인 천대의 상황 및 나아갈 방향'(총학생회장) 등	행사 계획서 : 상동 11쪽
2019	01. 31.	제1차 교수평의회	- 국립대학법인 전환 5년,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회 토론회 * 추진목적: - 국립대학법인 현황에 관한 구성원 간의 인식 공유 - 대학 현안에 관한 구성원 간의 입장 공유 및 소통 - 인천대학교의 중장기적 발전 과제에 관한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일시 : 18. 05. 29. (화) 15:00 ~ 18:00 - 장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 발표 및 토론 : 인천대학교 교수회 포함 각 구성원, 시민사회, 정당 등	회의록 : 상동 10쪽
2022	05. 11.	3차 운영위원회	시장후보 초청 강연회 준비 총장 1주기 평가 계획 대학 내 현안사항 관련 논의	
2022	05. 16.	교수회 주관 시장후보자 초청 강연회 개최	장소: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시장후보자(이정미, 유정복, 박남춘), 교직원 및 학생 강연주제: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과 책임	개최 계획안, 사진 6매
	05. 18.	교수회 주관 시장후보자 초청 강연회 개최	장소: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시장후보자(이정미, 유정복, 박남춘), 교직원 및 학생 강연주제: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과 책임	개최 계획안, 사진 6매

9) 기타

2018	08. 07.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한 전제교수회 의견을 제출하니 참고하여 수정해 주기 바람	공문 및 의견서 : 상동 29쪽 이하
2019	07. 3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 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 송부	전체교수회-88 (19. 07. 31.)
2019	01.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개정 계획 관련 의견 제출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교수회의 개정안을 별지 서식으로 제출	공문 및 별지 : 상동 17쪽
2019	06. 08.	고용휴직 교원의 신분상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 요구	질의사항 겐트대학교 총장으로 고용 휴직 중인 한태준 교수의 신분 구분 인천대 전임교원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의 적합성 여부 등	공문 및 집행부의 회신

6. 교수 복지 관련

가. 교수 복지 일반

1) 교원 보수, 연구년 제도, 교수업적평가, 강의 부담 등

1989	02. 03.	제4차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 봉급 인상하고 교수 개개인이 원하는 은행으로 다원화하여 줄 것 - 교수 협의회비를 매일 교수봉급에서 2,000원씩 징수토록 결정 - 박사 학위 소지자를 조교수로 임명하는 문제, 부총장 제도 실시, 교협의 서한을 재단에서 반송하는 문제 논의	교수협의회보 제2호: 2쪽										
	03. 25.	교수 봉급 인상 질의	-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수봉급 인상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한 모순 지적 - 상여금 인상 요구	인교협: 제30호										
1989	11. 27.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 올해(1990)부터 교수 전체연수 1회 단과대학별 연수 1회씩 실시하도록 건의 - 교수 정년퇴임식을 학교 측에서 주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함 - 교수회의가 계속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에 학교 측의 무성의를 성토했 - 상조회 활성화에 대해 논의 - 보직교수(교무의원)의 강의시간에 문제 있음 - 안전시설 문제(공학관 축대 및 공과대의 엘리베이터) - 구내 전화문제의 심각성을 논의 - 1년에 교수해외 연수를 5명 정도는 보내야함 이에 대한 예산 반영시켜야 함 - 도서관에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야 함	교수협의회보 제5호: 2쪽										
1997	11. 05.	연구년제 개정 건의	<table border="1"> <thead> <tr> <th>현 행</th> <th>개 정 안</th> </tr> </thead> <tbody> <tr> <td>① 2-가 (자격) 본교의 사립 경력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td> <td>①-----6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td> </tr> <tr> <td>② 3 (선정 절차)</td> <td>②~④ Vision1010계획에서 제시한 연구년제 개편 방향</td> </tr> <tr> <td>③ 4 (인원 및 기간)</td> <td></td> </tr> <tr> <td>④ 5 (복무 및 의무)</td> <td></td> </tr> </tbody> </table>	현 행	개 정 안	① 2-가 (자격) 본교의 사립 경력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①-----6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② 3 (선정 절차)	②~④ Vision1010계획에서 제시한 연구년제 개편 방향	③ 4 (인원 및 기간)		④ 5 (복무 및 의무)		인교협 97-11
현 행	개 정 안													
① 2-가 (자격) 본교의 사립 경력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①-----6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② 3 (선정 절차)	②~④ Vision1010계획에서 제시한 연구년제 개편 방향													
③ 4 (인원 및 기간)														
④ 5 (복무 및 의무)														
1997	11. 06.	교협임시총회 의결 사항 조치	- '재직 기간 15년 이상' 된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의결	인교협 97-11										
	12. 10.	연구년제 및 보직교수 설문	- 연구년제의 조정, 보직교수 사안(중임제한, 호봉, 직책 수당의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7대)연구년제 _설문서										

2003	03. 25.	운영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 교협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개선 방안을 학교 당국에 제시하고 협의하여 관철하도록 의결(내주 중) > 교수업적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후 성안하여,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회동하여 교협 안을 제시하고 개정에 반영토록 의결(4월 중) 	회의결과 안내문
2009	02. 02.	교수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확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이 매우 부족함 -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예산 편성이 필요함 	공문 : 상동, 35쪽
	02. 12.	송도 개교 및 30주년 기념사업 행사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주체: 교수협의회(한마음 Challenge 사업팀) - 기간: 09. 04. 14. ~ 09. 04. 30. - 내용: 교수, 동문, 학생을 선발하여 에베레스트 트레킹 	사업계획서 : 상동, 36쪽
2010	11. 19.	교수 복지와 관련된 사안을 집행부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 교내연구비 인상 - 원로 및 명예교수 처우 개선 - 낡은 컴퓨터 교체 - 공과대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등 총 13개 사안 	공문 및 요구 목록, 집행부의 답변 : 상동, 21쪽 이하
2011	04. 15.	교수 복지에 관한 요구사항의 해결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자 포상 방식 원상복귀 - 교직원 주차료 무료화 	공문 :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회의자료] (11. 12. 20.), 39쪽
2012	07. 02.	교원 연구년제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계획(안) 철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서 조항을 첨부하는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남 -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규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공문 : 상동, 37쪽
	07. 23.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의 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 문제 - 교원 연구년제 운영지침 일부 개정 문제 	이메일 문건 : 상동, 38쪽
2014	09. 30.	제10차 운영위원회 (교수 보수, 교수업적평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보수 정상화 문제: 서정현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직원 150명 승진 + 직원 성과급 지급(직원평가제 최수용 교수가 만듦) ▪ 법인화 후 교수: 보수 정상화는 요원 (30~40억 여유 예산: 기획처장) 규정조차도 없음 - 5) 교수업적 평가제 개선 문제 : ㊸ 최원(팀장), 서정현, 이미가엘, 송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구용 교수: 학생상담을 학점으로 인정 제안 	
2015	03. 16.	교·직원 보수 관련 자료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화 후 교수협의회에 교원의 열악한 보수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와 문의 - 교원의 경우 교협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향후 TF를 구성하고자 함 	인교협 15-04

2015	04. 28.	제16차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교원 보수 정상화 관련 자료 협조 요청 학교 거부 사태 <p.6 참조> - 03. 30.까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음 - 부총장 : “보수 정상화는 우리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교협은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교협이 요구한 서류는 보안 사항이라 줄 수가 없다.” - 교무처장 전체교수 메일 	정기총회자료집
2017 교수회 1대 김용민	01. 05.	교원 대학생 자녀 지원제도의 조속한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제도가 중단되어 교수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학자금 지원의 미집행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응책을 통지해 주기 바람 	공문 : [인천대학교 교수회 2018년 정기총회] (18. 02. 28.), 14쪽
2017	09. 27.	교무처장의 교수제도 개선 TF팀 참여 요청에 대한 답변	<p>다음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조건으로 참여할 것임</p> <p>교수의 보수, 처우, 복지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p> <p>교수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p>	공문 : 상동 37쪽
	10. 12.	제5차 교수평의회	<p>2017. 추계 교수평의회 워크숍 일정 논의</p> <p>교육 및 교수제도개선 TF팀 참여연구원 2명 추천 예정</p> <p>자유전공학부 신설 안에 대한 논의</p>	상동 7쪽
	10. 18.	교수 및 교육제도개선 TF팀 참여 연구원 추천	<p>홍윤식 교수 (컴퓨터공학부)</p> <p>유병국 교수 (무역학부)</p>	공문 : 상동 38쪽
2020	05. 04.	18년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근속포인트 지급 기준 차등적용에 대한 개선 요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년 1월 이후 입사한 전임교원의 근속포인트 지급 기준의 차등적용에 대한 교수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에 입사한 전임교원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근속연수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상기 기준 변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이후 입사한 전임교원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내 포인트 지급기준을 근속연수가 아닌 우리대학 재직연수로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바 구성원에 대한 지급기준의 차등 적용은 구성원 간 복지수혜의 보편성 훼손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3. 이에 기존같이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 	전체교수회-60 (20. 05. 04.)

	05. 06.	교수회 교원복지연구관련 행정조치 확인요청	- 교수회는 2019년 ‘교원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연구결과 및 교원설문조사결과를 대학당국에 알린 바 있음 그러나 어떠한 행정조치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음 이에 대학평의회에서는 적절한 확인작업을 진행하여 교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전체교수회-63 (20. 05. 06.)
2021	03. 30.	제2차 교수평의회	2021년 교수활동경비 지원계획 현 집행부의 업무 처리 과정 및 향후 개선 요청에 대한 전체메일 발송 교수회 차원 연구 계획	회의록 : 상동 14쪽
	04. 05.	2021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안)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및 의견	이 ‘계획(안)’이 적법한 절차와 적절한 의견 조회 없이 확정·통보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함 연구처가 무리하게 추진한 점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일곱 가지 문제점을 지적	이메일 문건 : 상동 35쪽
2021	05. 07.	2021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안) 시행 보류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지난 4월 교수회는 이 계획(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 5월 4일 집행부는 이 계획(안)의 시행을 보류할 것이라고 알려왔음 교수회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메일 문건 : 상동 40쪽
2022	07. 28.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및 수당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구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인상 계획이나 추진 사항이 있는가? 전임교원에게 성과급 및 연구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추진 의사가 있는가?	공문 및 집행부의 회신
2022	08. 15.	초과강의료 인상, 성과급 및 연구장려금 지급에 대해 구성원에게 알리는 글	2학기부터 초과강의수당의 인상이 결정된 것은 작은 성과라고 생각함 성과상여금과 연구 장려금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함	이메일 문건
2023	07. 14.	신임교원 책임시수 감면 확대 적용 요청	신임교원 시수감면의 확대 적용 요청	공문

2) 소위원회 구성

2010	10. 05.	화요운영소위원회	- 교수복지 소위원회 구성 및 추진사항 - 교수 주거 대책 소위원회 구성 및 추진사항 - 총장중간평가 소위는 회장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회의록(2010. 08. - 2011. 11.) : [교수협의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11. 03. 30.), 1쪽 이하
	11. 09.	화요운영소위원회	- 복지위원회 급여 지급 현황조사	상동, 6쪽
2020	12. 03.	제13회 교수평의회	- 교수인권위원회 및 교수복지위원회 설립: 2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명으로 구성	회의록
2021	01. 12.	교수회 인권·복지위원회 운영 안내	구성: 교수회 회장단 복지 현안 및 권익침해 문제를 공식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 정식 출범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 연구 TF팀을 통해 관련 정책 및 법률 검토	이메일 문건 : 상동 23쪽
	04. 21.	6차 운영위원회	- 교수회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 (교수노조 연구 등)	
	04. 21.	교수회 특별위원회의 예산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인천대학 예산 관련 연구를 수행한 교수회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수립과 편성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이 개정(안)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메일 문건 : 상동 37쪽

3) 신입교원 관련

2014	04. 28.	제5차 운영위원회	3) 신입교수 간담회 (04. 15.) - 공간문제, 도입기자재 공간문제, 신입교수 연구비 배정문제, 신입교수보육사업, 직원의 책임성문제, 교수업적 평가(2학기 임용자), 직원, 총·처장도 평가 시스템 필요, 국책사업 전담 전문 인력 신규배치필요 - 승진규정: 거점국립대 3~4배, 인하대 경희대 높고 성대수준, 학문 간 불균형 문제	정기총회자료집
2015	06. 30.	제18차 운영위원회	2) 학교 집행부 간담회 (05. 21.) : 부총장, 교무, 기획, 연구, 대외교류처장 □ 신입교수 연구비 및 특별 승진 관련 : 개선약속	정기총회자료집

나. 교수 노조 및 노사 협의체 관련

1) 교수 노조 필요성 연구 및 홍보

2021	09. 09.	14차 운영위원회	- 교수노조 관련 교수회 연구수행 논의 - 교수회 현안 사항 (홈페이지 등)에 관한 논의 - 예산 TF 연구 결과 발표 등 일정 수립 논의	
2021	10. 25.	15차 운영위원회	- 교수 노조 필요성 및 향후 추진 일정에 관한 논의 - 교수 노조 연구 수행 등 진행 상황 점검 - 교수회 2022년 예산편성 사항에 관한 논의 - 평의원회 정관 개정 논의	
2021	11. 30.	인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안내문 발송	- 노동운동의 전개가 아니라 교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서임 -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회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임 - 새로 출범할 교수조합이 추구할 목표를 열거 - 인천대학교 교수회 운영진 이름으로 구성원에게 발송	이메일 문건, 교수조합 가입 안내문
	12. 02.	교수조합 가입 안내 홍보 Q&A 발송	교수조합은 왜 필요한가?	이메일 문건
2022	01. 18.	2차 운영위원회	대학현안사항 및 교수노동조합 협력사항 논의	
	01. 20.	3차 운영위원회	교수회 운영 및 교수노동조합 협력사항 논의	
	01. 27.	4차 운영위원회	교수회와 교수노동조합 업무 상생 및 협조사항 논의	
	02. 11.	인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알림	02. 07.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발부받아 본격 활동 시작 교수회가 할 수 없었던 대학본부와의 단체협약 등 교권확립과 복지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이메일 문건
2022	03. 09.	대학 지배 구조변화와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된 교수회 연구 용역 보고서 전달	우리대학 교원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연구보고서와 요약문을 함께 첨부	이메일 문건, 요약문

2) 노사 협의체 관련

2022	08. 01.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및 답변 요구	노사협의회가 규정대로 개최 및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노사협의회 구성 및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전임교원 대표가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공문 및 집행부의 회신
2022	08. 12.	노사협의회 관련 답변 요구	현재 전임교원 대표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이는 근로자 참여법에 반하는 위법임 노사협의회를 해체하여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며 추후 일정을 회신해 주기 바람	공문 및 집행부의 회신
	08. 09.	교수회 알림 뉴스레터로 노사협의회 관련 문건 발송	교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처우, 고용조건, 근로환경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	이메일 문건
	08. 17.	노사협의회 재설치 및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내문	교수회의 질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해 집행부가 문제점을 인지해서 노사협의회를 적법하 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음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낌	이메일 문건

7. 대외 활동 관련

가. 교육부 및 중앙정부 정책 관련

1996	09. 04.	고등교육법 제정 관련 교육부에 의견 제출	- 고등교육법 제정 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 교수회 규정이 빠져있음 > 학칙 승인제는 대학 자율성 침해	인교협 96-39
1996	09. 17.	교육부에 의견 제출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총장, 교원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는 안에 대해 반대 - 위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교협의 대응이 특정 총장 후보의 제의나 공약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림	인교협 96-43 인교협 96-44
	11. 05.	고등교육법 제정 관련 서명 작업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고등교육법 제정 관련 서명 작업 협조 요청 받음	
	11. 15.	서명 결의문 발송	- 국교협 96-44 와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서명을 송부	인교협 96-50
1997	01. 0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	인교협 97-1
1999	04. 29.	운영위원회 회의 - '교수계약제 대토론회' 참가 여부 및 기타 안건 토의	1. 김철홍 부회장 사퇴 표명 >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년제 해외파견교수로 발령받아 직무 수행 불가 > 공대에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임해 주기를 요청하기로 하고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 수행하기로 함 2.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를 위한 지역순회 대토론회' 참가 여부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주관'(또는 보다 올바른 용어로 판단되는 경우 '주최')하기로 결의함 3. 행사부대비비용으로서 플랜카드 제작비용, 초청인사 저녁식사 비용 부담하기로 함 4. 현재 학교 당국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교수업적평가제'에 대응하여 교수협의회 자체 교수업적평가제(안)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 1학기 정기총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5. 다음 주 월요일경 임시회의 개최하기로 함 6. 기획처장을 초청하여 대학 이전 문제와 관련한 설명 청취 예정 7. 부총장을 초청하여 대학발전협의회와 관련한 설명 청취 예정	회의록, 자료집 (대토론회)

2004	11. 12.	고등교육법률개정안 검토 및 의견 제시	-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관리 업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대학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률개정안을 발의 준비 - 이에 대하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이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2010	10.15.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4차 임시총회	-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활동방향 및 일정	
2013	01. 21.	'고등교육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승진 절차 재시행 요청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개정 이전에는 상위법과 현행 학교 규정에 따라 승진 절차를 시행해야 함	공문 및 집행부 회신 : 상동, 55쪽 이하
2013	11. 28.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대학평의원회) 재개정 청원 서명 안내	-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 국교련이 주도하는 이 개정안의 재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관련 이메일
2017	11. 28.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대학평의원회) 재개정 청원 서명 안내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국교련이 주도하는 이 개정안의 재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관련 이메일 : 상동 66쪽
2022	09. 05.	인천대법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안의 골자 :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1/2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인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수회는 불수용 의견을 제출함	공문 및 검토의견서

나. 인천시 관련 (재산 관련 제외)

2008	04. 08.	교협 의견서 제출	- 인천시의 교원 임용권 및 징계권 회수 조례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	의견서 : 상동, 8쪽
	04. 10.	교협 의견서 제출	시립대 운영위원회의 규칙 개정안 및 월권적 운영의 부당성 지적	의견서: 상동, 13쪽
2008	10. 27.	의견서 제출	- 특별회계와 기성회계 통합 관련 일방적인 인천시의 회계일원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교수협회의 입장을 인천시에 제출	관련 문건 : 상동, 29쪽